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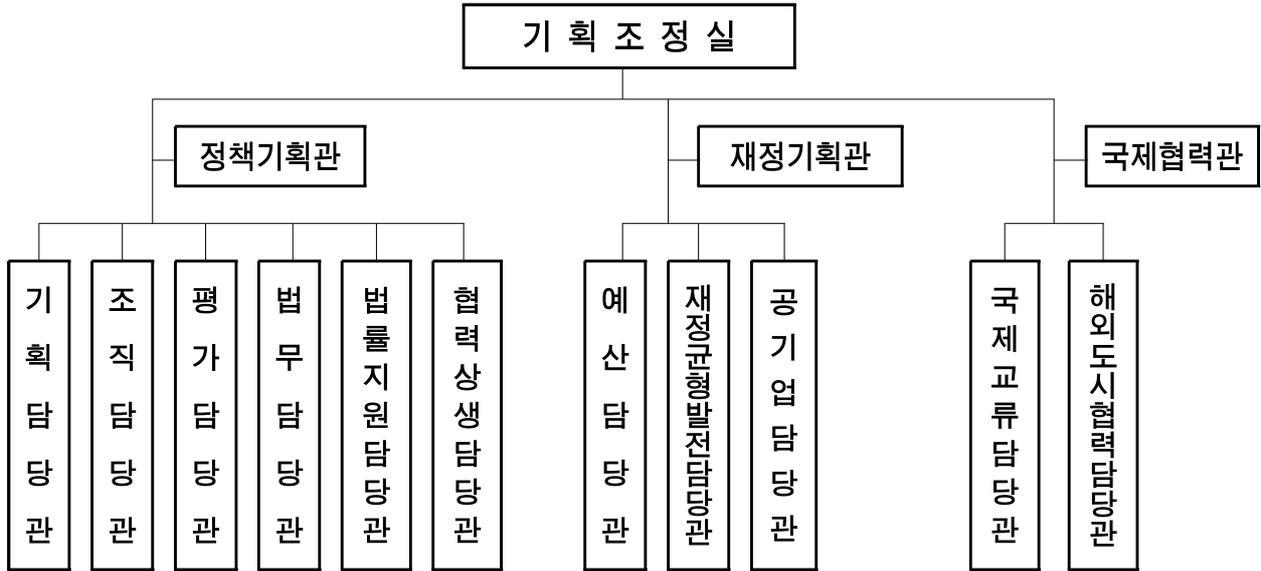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20. 3.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1담당관, 52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306/288명(정원/현원)

(’20. 2. 21.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06/287 (171)	256 / 240	42 / 38	1 / 1	7 / 8
기 획 담 당 관	39/36 (14)	31 / 28	6 / 6		2 / 2
조 직 담 당 관	35/31 (21)	34 / 31	/		1 /
평 가 담 당 관	33/32 (21)	31 / 30	1 / 1		1 / 1
법 무 담 당 관	26/25 (16)	23 / 23	2 / 1		1 / 1
법률지원담당관	28/29 (23)	13 / 13	15 / 15		/ 1
협력상생담당관	17/17 (7)	14 / 15	3 / 2		/
예 산 담 당 관	40/36 (17)	38 / 34	1 1		1 /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5/21 (13)	24 / 21	1 / 0		
공 기 업 담 당 관	21/20 (10)	19 / 18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6/24 (16)	16 / 15	8 / 7	1 / 1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16 (13)	13 / 12	3 / 3		1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협력상생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산 총 규모 : 1조 6,100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감
합계	3,654,786 (80)	1,610,029 (75)	-2,044,757
일반회계	1,247,406 (59)	602,275 (58)	-645,131*
특별회계	93,546 (-)	76,032 (-)	-17,514
기금	2,313,834 (21)	931,722 (17)	-1,382,112*

* '19년 결산 후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확정 전 적립금 미반영으로 규모차이 발생

○ 일반회계 : 총 6,023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감
합계	1,247,406 (59)	602,275 (58)	-645,131
기획담당관	1,152 (3)	1,135 (2)	-17
조직담당관	87,315 (11)	104,073 (12)	16,758
평가담당관	1,948 (5)	2,579 (5)	631
법무담당관	778 (3)	758 (3)	-20
법률지원담당관	5,732 (2)	6,369 (2)	637
협력상생담당관	3,386 (3)	3,976 (3)	590
예산담당관	289,587 (3)	268,345 (3)	-21,242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44,837 (11)	202,455 (10)	-642,382
공기업담당관	814 (4)	945 (4)	131
국제교류담당관	5,995 (7)	6,015 (7)	20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862 (7)	5,625 (7)	-237

○ 특별회계 : 총 760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감
예산담당관	93,546 (-)	76,032 (-)	-17,514

○ 기금 : 총 9,317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 계획(사업수)	증감
합계	2,313,834 (21)	931,722 (17)	-1,382,112
재정투융자기금	1,050,470 (-)	481,442 (-)	-569,028
감채기금	1,248,062 (-)	435,358 (-)	-812,704
대외협력기금	14,231 (21)	13,747 (17)	-484
지역개발기금	1,071 (-)	1,175 (-)	10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선 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Ⅲ.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 ① 시정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
 - ※ 코로나 19 종합 대응상황 보고
 - ※ 코로나 19 관련 중국 도시 긴급지원 및 외교전략 수립
- ② 대시민 약속 민선7기 공약 이행 관리
- ③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 ④ 신뢰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
- ⑤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협업평가 추진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 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③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 ④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운영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②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
- ③ 2단계 재정분권 적극적·체계적 대응 추진
- ④ 서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
- ⑤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⑥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
- ⑦ 투자·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방안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 ① 지속가능한 상생교류를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
- ②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확대
- ③ 글로벌리더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 ④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로 세계도시 상생발전 기여
- ⑤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① 시정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

※ 코로나 19 종합 대응상황 보고

※ 코로나 19 관련 중국 도시 긴급지원 및 외교전략 수립

② 대시민 약속 민선7기 공약 이행 관리

③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④ 신뢰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

⑤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협업평가 추진

1

시정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현안 발생시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추진 방향

- 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중장기 **시정 마스터 플랜 기획·수립**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현안발생시**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 적기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 '20년 추진 계획

- 민선7기 시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관리**
 - － 최상위 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방향 제시
 - ※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 단년도 평가계획과 연동수립
 - － 공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대시민 공약 실천(메니페스토) 지원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실·본부·국의 협치 지원
 - － 정례·수시 회의체(정례간부회의 등) 운영을 통해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
 -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부여
 - ※ 민선 7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조정회의 실시(예정)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긴급현안회의 소집을 통한 확산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중장기	상 시	긴 급
시정철학 반영 시정운영계획 수립·관리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현안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코로나 19 종합 대응상황 보고

(기획담당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 대응상황을 보고 드림

※ 공식 명칭변경(2.1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코로나19 현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1.20) → **경계(1.27)** →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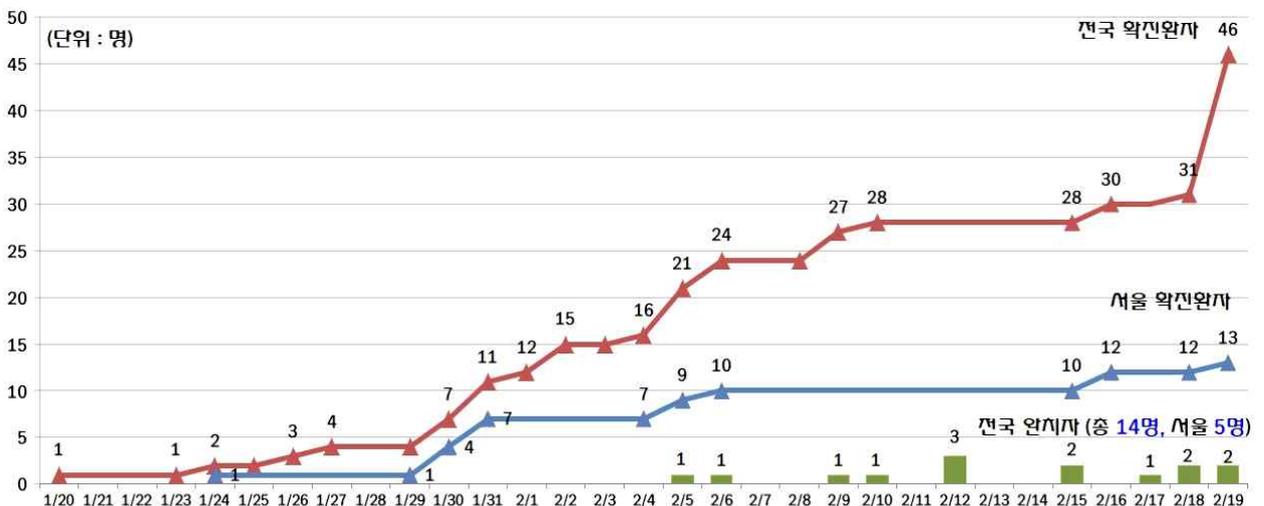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46명 ('20. 2. 19. 12시 현재)

구 분	확진환자			의사환자		
	소계	격리중	완치	계	검사중	격리해제
전 국	46명	32명	14명	10,365명	1,030명	9,335명
서울시	13명	8명	5명	3,051명	319명	2,732명

※ 국외 발생현황 : 확진환자 75,150명, 사망 2,009명('20. 2. 19. 09시 현재)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완치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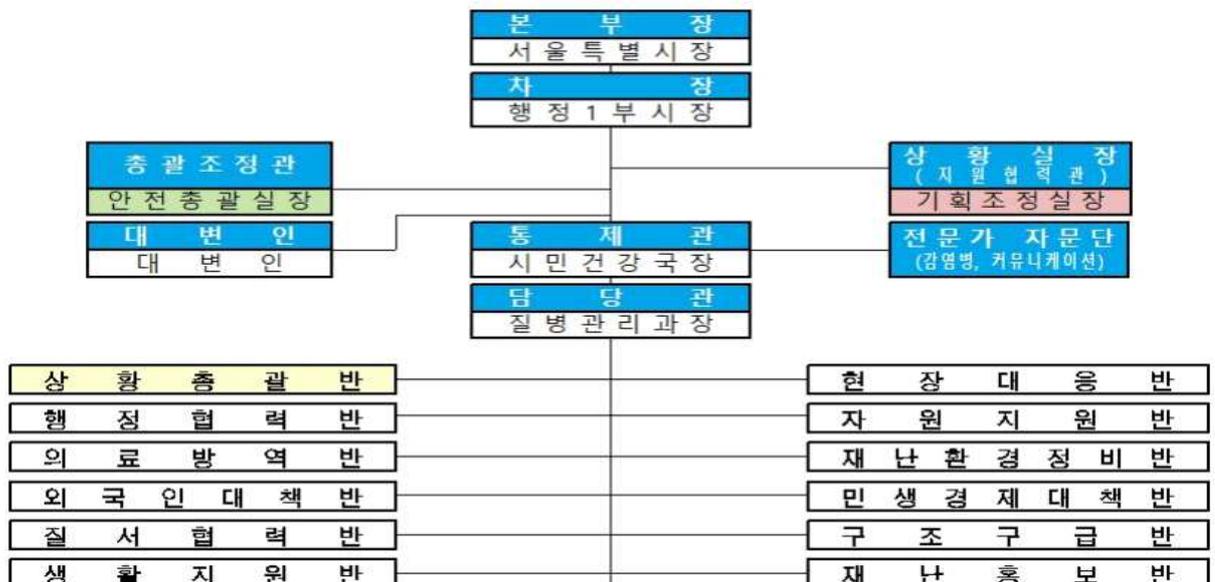
□ 대응방향

- (감염 확산 방지) 선제적·전방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 정부, 자치구 및 보건소, 민간 전문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
 - 대시민 예방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 (시민생활 안정)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일상생활 안정 유지
 - 근거 없는 **과도한 불안 및 공포 방지**를 위한 실시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민생경제 지원 대책** 마련

□ 추진경과

- '20. 1. 4. : 「서울특별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구성
- '20. 1. 20. : 「市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대책반」 구성
- '20. 1. 26. ~ : 매일 「종합대책회의」 개최 및 전사적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쏠 실·본부·국 대응체제로 전환
- '20. 1. 28.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20. 1. 31.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개편
 - 상황실장, 총괄조정관, 전문가 자문단, 상황총괄반, 실무반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 분야별 조치현황

① 감염 확산 방지

-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감염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전·신속 차단
 -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입국한 **외국인 명단 조속한 확보 및 전수조사** 실시
 - 중국인 밀집 지역 및 다빈도 이용시설 **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전파** 및 **방역관리**
 -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거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 ▶ **대학-지자체-보건소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학생 수용공간 발굴·연계** 등
 - ▶ 교육부, 전국 모든 **대학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1.31. 市 건의 / 2.5. 시행)

-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 총력 대응
 - **선별진료소 56개소**(보건소 26, 응급의료기관 28, 시립병원 2) 및 **이동형 진료소 5개구** 운영
 - **신속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검사기능 강화(2단계 24시간 → 1단계 6시간 소요)
 -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시간 코로나 정보 제공** 및 120 상담 대응 강화
 - ※ 대시민 서울시 일일보고 「  **YouTube** 생방송」 추진(매일 15:00, 1.30.~)
 -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내 전파 가능성 총력 저지**
 - ▶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 조사**,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 강화
 - ▶ 시·구립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및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 제한
 - ▶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따릉이·공유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방역강화**
 - ▶ 중국인 유학생, 건설현장 등 일용직 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집중방역 대상 다각화**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스크 착용 (사람들 다중 이용시설 방문 시 필수) 2. 손 씻기 (정수) (주요 이용 공간이 방문 후 2시간) 3. 기침 예절 (기침은 옷소매나 휴지나 티슈로) <p>정통수칙을 꼭 지켜, 나와 이웃을 지켜주세요! 서울시가 시민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p> <p>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관할 보건소 / 1339 / 120</p> <p>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PRECAUTIONS FOR NOVEL CORONAVIRUS INFEC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ear a mask (in a public place when people are crowded or waiting under for 20 minutes) 2. Wash your hands frequently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20 seconds) 3. Cough Etiquette (Cover your mouth with elbow or tissue) <p>Please follow these precautions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neighbors!</p> <p>For further reporting Novel Coronavirus infections ☎ 1330 / 1345 / 120</p> <p>If you have any symptoms, please contact any of the numbers above before going to the hospital. Seoul Metropolitan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p>	 <p>新型冠状病毒肺炎 预防行动守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佩戴口罩 (公共场所或人员密集场所应佩戴口罩) 2. 洗手 (勤洗手) (使用肥皂或洗手液, 用流动水洗手, 揉搓动作要彻底, 每个步骤不少于15秒) 3. 咳嗽礼仪 (咳嗽或打喷嚏时用纸巾或肘部遮挡) <p>请务必遵守行动守则, 保护自己与家人的健康!</p> <p>关于新型冠状病毒肺炎的更多预防知识 ☎ 1330 / 1345 / 120</p> <p>若有疑似症状, 请在就医前拨打以上咨询电话 首尔市灾难安全对策本部</p>	 <p>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予防行動の心得</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マスク着用 (公共施設や混雑した場所では必ず着用) 2. 手洗い(清拭) (石鹸やハンドソープを使い、流水で20秒以上十分に洗う) 3. 咳のエチケット (咳やくしゃみはティッシュや肘で覆って行う) <p>行動の心得を必ず守り、自分と相手の身を守りましょう!</p> <p>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予防については、 感度の高い方がある方は、発熱や咳が出た際には、 コールセンターや保健所に相談してください。</p> <p>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予防に関する情報は、 ☎ 1330 / 1345 / 120</p> <p>ソウル市 災害安全対策本部</p>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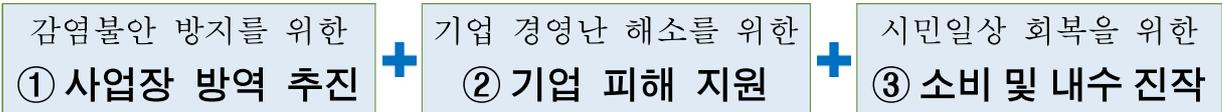
- **(방역물품)**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수급관리 철저
 - 일괄 구매 및 부서별 개별 구매(Two Track 전략)를 통한 **신속한 물량 확보**
 - 의료진, 다중이용 시설 및 장소(대중교통 등), 저소득·취약계층 우선 지원
 -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국민안전을 불모로 한 **시장교란행위 근절 단속** 강화
 -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2.1. 市 건의 / 2.12. 시행)
- **(대응인력)** 비상대응체계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인력 확보방안 검토
 - 동주민센터 소속 돌봄SOS센터 **간호직 순환 근무** 및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민간 유휴 의료인력(간호사 등) 신속 투입 방안 추진
- **(자가격리 대응)** 자가격리 급증에 대비한 시설 및 의료인력 선제적 준비
 - 서울시가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 및 민간시설까지 확대한 적극·선제적 확보
 - **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운영**(1.8.) 및 1.10. **8명 첫 입소**(중국 관광객 7, 내국인 1)
- **(대정부 건의)**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서울시 감염병 대응 선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개선방안** 지속 건의 및 **중앙정부 채택·시행**
 - ▲호흡기증상 사례정의 확대(인후통·기침 등), ▲자가격리 대상자 확대, ▲우한입국자 정보공유, ▲중국 입국자 전부 능동감시 확대, ▲대학개강 연기, ▲긴급수급조정조치, ▲1339콜센터 인력확대 건의 등 市 제안사항 정부 반영

2 시민생활 안정

- **(불안감 해소)** 바이러스 불안·공포 확산을 막고 시민의 불안해소 적극 추진
 -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
 - 확진자 방문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과학적 바이러스 사멸 확인(보건환경연구원 환경검체) 후 **‘클린존’** 안내문 부착
 - **‘클린존 온라인 맵 제공**(방역현황 안내 등)으로 시민 안심 분위기 조성



- **(경제활력 제고) 감염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소비·내수 진작**
 - 업종 및 분야별 **민생경제 대책 TF 조직 및 대응 체계** 구성·운영(2.6.)
 -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2.14.)
 - ▶ 관광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및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 ▶ 관광업계 특별융자 설명회 개최(2.20.)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최소화 및 **기업 피해 극복 대책 발표**(2.18.)



① 「사업장 방역」 분야

- ▶ **35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대적 방역** 실시 및 ‘클린시장’ 운영
- ▶ 코로나19 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2,700명** 확대

② 「기업 피해 지원」 분야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5,000억원)**
-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등 세제지원
- ▶ 피해업종 **1,000개 기업 대상 피해실태 조사** 및 추가대책 마련

③ 「소비 및 내수 진작」 분야

- ▶ 시·구 전체 재정의 62.5%인 **21조 9,043억원** 상반기 **신속집행**
- ▶ **서울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상향**(1인당 50→100만원) 및 캐시백(2~5%) 지원
- ▶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확대**(참여 시장 29→35개소, 주5일 →주6일)

향후계획

- **24시간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체계로 감염병 차단 및 사태 종식 노력 지속**
- 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얼어붙은 경제·소비심리 개선** 대책(피해극복 포함) 추진

→ ◆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상권침체, 불필요한 휴·폐업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차단 노력



코로나 19 관련 중국 도시 긴급지원 및 외교전략 수립 (국제교류담당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도시에 의료·시민용 물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신뢰구축 및 코로나19 이후 對 중국 도시외교 정책방향 수립

□ 추진 배경

- 중국 도시 대부분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
 - 중국내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에서도 확진자 발생
- 자매우호도시,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주한중국대사, 학계 전문가 등 국내외 관계자들로 부터 서울시의 **적극적인 對 중국지원 요청 쇄도**
 -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중국지역에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의 전염확산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중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적극 지원하여 돈독한 신뢰와 우정 구축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6조(기금의 용도)제②항 제2호 외국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 지원대상 : 자연재해 전염병 등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한 외국 지방정부
- 지원규모 : 구호 필요액에 따라 차별적 지원
- 지원내용 : 긴급 구호자금 또는 구호물자 제공, 구호인력 파견 등

□ 추진 내용

① 중국 자매우호도시 및 전략도시에 방역물품 지원

- (재원확보) 대외협력기금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사업비 6억원 편성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비 3억 증액(3억→6억)

- (市) 국내수급 관련 문제가 없는 의료진용 물품을 먼저 제공하고
 마스크 등 품질상품은 국내수급 안정화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
 - 1차 지원: 자매도시인 베이징시에 긴급 확보된 의료용 물품 전달(2.11.)
 - 2차 지원: 충칭시 등 4개도시에 우선 확보된 방역용 물품 전달(2.14.)
 - 3차 지원: 자매도시인 베이징시에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 전달(2.21.)
- ➔ 보호복 1.4만, 고글 1만, 안면보호구 90, 열화상카메라 40, 마스크(국내수급 고려 순차지원)



- (민간) 민간기업 및 단체의 기부물품 활용하여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등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마스크 5만장), 글로제닉(마스크 40만장)

②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국 도시외교 정책 방향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 방역물품제공, 중국응원 영상메세지 등 통해 市 긍정적 이미지 구축
 - 인민일보, 중국CCTV 공식 웨이보(SNS) 4억 이상 리뷰 등 중국네티즌 큰 호응
-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국 자매우호도시 및 동북3성과 도시교류사업 추진
 -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및 중국 관광객·투자의 서울시 유치 등
- 아시아지역 도시간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
 - 재난, 감염병은 일상적이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도시간 사전대응체계구축 필요

□ 향후 일정

- 중국 자매우호도시, 동북 3성 맞춤형 도시교류 정책 수립 : '20.3월말
 - 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대중국 교류 활성화 도모

2

대시민 약속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

민선7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민선 5·6기 시정성과를 지속시키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외부기관 평가 등에 대응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 (기획담당관-12753호, 2018.9.12.)

□ 공약 현황 : 7대 분야 66개 핵심, 총 229개 세부사업

- 정책비전 :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 공약사업

정책목표	정책내용	핵심	세부
1. 미래특별시	-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	5	25
	- 기술 혁신을 통한 시민의 편의 증진	4	7
2. 상생특별시	-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	5	21
	- 시민 중심의 생활 행정 및 공정경제 실현	4	16
3. 사람특별시	-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9	23
4. 안전특별시	- 안전한 도시 인프라	3	11
	- 쾌적하게 숨쉴수 있는 에너지 생산도시	3	17
	- 안전한 보행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3	14
5. 일상특별시	- 시민문화, 시민교육 활성화	8	26
	-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1	5
6. 민주주의특별시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3	11
7. 맞춤형 시민정책	- 자영업자들의 소득, 건강, 재기를 지원	3	9
	- 노동존중 사회 실현	3	9
	- 청년의 자산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3	5
	- 일·생활 성평등 실현	3	18
	- 장애인 생활지원 확대, 기술개발	3	7
	- 어르신들을 위한 일, 건강, 관계망 지원	3	5
합계		66	229

□ **외부기관 평가개요** ※ 매해 6월 기준 자체평가, 12월 기준 외부평가

- 평가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신문 공동(예정)
- 평가대상 : '19.12월말 기준 공약 이행실적(총 229개 공약)
- 평가항목 : 5개 항목(공약이행 완료, '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 평가기간 : '20. 3. 16~4. 3. ※ 결과발표 : '19. 5월 넷째주(예정)
 - '20년 평가항목별 관련자료는 '20.3.15일안에 市 홈페이지 공개 예정
(‘공약&매니페스토’, <http://mayor.seoul.go.kr/app/seoul/manifesto.do>)

'19 상반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 및 자체평가

- ▶ 점검대상 : 공약사업 이행실적 자체점검 결과(6.30일 기준)
- ▶ 점검기간 : '19.7~11월
 - 주관부서 자체 평가 및 총괄부서 종합 분석·평가 : '19.7~8월
 - 일부추진 대상(후보) 공약사업 점검회의 개최 : '19. 9월
 -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市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공유 : '19. 11월.
- ▶ 점검결과 : 총229개 공약 중 208개(90.9%) 정상추진(사업완료 및 정상추진)

□ **우리시 평가 대응기조**

- 대응 목표 : 'SA' 등급 유지('15년~'19년 5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 대응 필요성
 -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고, 서울신문을 통해 평가결과가 등급별로 공개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 등이 확보되는 평가에 해당

□ **향후 일정**

- 市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공약 실천계획서 공개 : ~'20. 3월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완요청 및 문의 시 적극 대응 : '20. 3~4월

3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각종 분권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 맞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하여 제도별 대응방안 마련·추진

□ 추진 방향

- 자치분권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으로 성공적인 제도 안착 및 자치분권 확대 추진
- 분권 협력 네트워크와 공조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조성

□ '19년 추진 실적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를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및 사전작업 추진
 - '자치경찰준비TF' 구성(19.4월) 및 1차 회의 개최(19.5월) : 소관부서(34) 업무분장 검토
 - 서울시 자치경찰 안착방안 자문을 위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개최(20.2.12)
 - 서울경찰청과 정례회의 추진(19.7월~) : 총 6회 개최, 청사·조직·예산·인력확보 등 논의
 - 경찰 현장방문(19.7월~) : 서울 지구대(7월) 및 경찰서(8월), 제주자치경찰(9월)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등 대정부·국회 건의
 - 시도협을 통한 '지방자치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 법안 등 통과 촉구(19.1~)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조직권 자율화 및 자치경찰 관련 방문건의(19.9, '20.1) 등
- 자치분권 분위기 확산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주간 행사' 등 추진
 - 시민 중심의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 자치분권 행사' 개최 (10.25~11.3)
 - ① 온라인 사전토론(9~10월, 페이스북) : 자치경찰/재정분권/자치입법 등 3분야 의견수렴
 - ② 워크숍 및 원탁토론(10.25, 100명 참여) → ③ 심화토론·발표회(10.31, 300명 참여)
 - ④ 기타 부대행사 : 자치분권 시민특강(4회, 10.25~30), 자치분권 홍보패널 설치 등(11.1~3)
 -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운영(19.6~7) : 시민·공무원 60명 대상 자치분권 강의
- 자치분권 현안 논의를 위한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3회 개최(19.6,8,12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개최(19.3)

□ '20년 추진 계획

- **(자치경찰)** 서울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실시 준비작업 지속 추진
 - 자치경찰 예산·인력·사무공간 등 분야별 논의·검토 등 사전작업 실시
 - ⇒ (법안통과 전) 유관기관(서울경찰청 등)과 정기 협의 및 시민참여 준비위원회 구성
 - (법안통과 시) 전담조직 설치 및 예산확보, 시민·경찰대상 홍보 등 시범실시 대응
- **(사무이양)** 시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 지속 이양 요구
 - 신속성, 현장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지방이 수행하기 적합한 기능 이양
 - 근로감독·임금체불 관리, 전월세 상한제 등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무 이양 추진
 - ⇒ (단기) '지방일괄이양법'(20.1월통과) 미반영 사무 이양 및 예산지원 요청
 - (중장기) 서울시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권한 체계적 발굴 및 권한이양 지속 건의
- **(자치조직권)** 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자율권 확대 건의
 - 경제 등 글로벌 파워도시지수 7위 도시의 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조직 자율권 보장 필요
 - ⇒ (단기) 부단체장 정수 증원(+2)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 (중장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 설치권한을 조례로 규정토록 법령개정 건의
- **(재정분권)** 효율적·체계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서울시 재정분권 로드맵 수립
 - 「서울시 재정분권 TFT」 운영으로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
 - ⇒ (단기) 재정분권 추진동력 확보 위한 여론조성, 대국회 대응채널 활용 정책 건의
 - (중장기)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건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

□ 향후 일정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신규(재)위촉('20.2월) 및 회의 개최 : '20.3월 限
- 중앙부처 기능이양 대상사무 부서의견 수렴 및 자체발굴 : '20.2월~

4 신뢰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

행정수요 증가·다변화를 반영한 신뢰 기반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추진 방향

- 행정사무 다변화를 반영한 민간의 행정 참여 확대 및 상호협력 관계 확산
- 청렴교육 강화 및 체계적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성 확보

□ 민간위탁 현황 : 총 371개 사무, 8,670억원 (‘20.2월 기준, 천/억원)

계		예산 지원형						수익 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71	8,670	348	8,644	247	7,081	101	1,563	23	26

□ '20년 추진 계획

- (지침 시달)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지침에 반영·시달(‘20.1.)
 - 재위탁 공모시 운영평가위원회 적용, 수탁기관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의무 참석, 종사자 채용심사위원 구성요건(제척·기피·회피) 신설,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
- (청렴 교육) 청렴리더 육성을 위한 기관장 및 사업부서·종사자 교육 의무화
 - 사업부서 담당자 및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총 4회, ’20.3.~10.)
 - ※ 교육과목 : 민간위탁 사무관리, 노무·회계관리, 청렴교육(주요 감사 지적사례)
 - 수탁기관 대표자 대상(시설장 포함) 청렴·인권특강 정례화(’20.11.)
- (제도 개선) 수탁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유형 세분화 등 추진
 - 사무형, 시설형, 수익창출형 외 중간지원조직형으로 사무유형 세분화,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 (지도 감독) 지도점검 이행평가 강화로 수탁기관의 적극적 사업개선 유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지표 배점 확대(5점→8점)
 - 관리자(팀장급), 담당자, 분야별 전문가(공익감사단 100명)로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 향후 일정

- 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전문가 수탁기관 위탁부서 대상 의견수렴, 2회) : ’20. 4. 10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5회), 종합성과평가, 통합회계감사 추진 : 연 중

5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협업평가 추진

협업 및 협치평가를 통해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치' 문화를 정립코자 함

□ 검토 배경

- 시정핵심기조인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주요시정 사업의 성공 견인
- 협업성과 평가 및 포상을 통해 부서 칸막이 해소와 협업 참여 유도

□ '19년 추진 실적

① 협업우수기관 평가

▶ 사업추진 부서 간(주관부서, 조력부서) 협업성과를 기관평가(상·하반기) 시 반영하여 시정 역점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 및 성과 제고

- 「'19년 협업우수기관 기관평가 반영 계획」 수립('19.7월)
 - '19년 협업평가 시범운영 대상사업 평가, 기관평가 시 최대 3점 부여

「협업우수기관 평가」 개요(주관:평가담당관)

- ◆ 시 기 : 연 2회 상·하반기 / ◆ 대 상 : 49개 기관(실국본부·사업소)
- ◆ 평가기준 : 과제성격(중요도 등)·협업과정(협업노력도 등)
협업성과(협업효과성 등) 3개 항목 정량·정성평가
- ◆ 평가사업 : 2개 이상 기관 간 협업사업(주관부서 + 조력부서)
- ◆ 평가결과 : 총 4개 사업 선정, 기관평가 시 1~3점 부여

- '19년 하반기 협업우수기관 평가 시범운영 대상사업 선정('19. 8월)
 - 3개 분야 총 17개 사업 선정(주관 17개 실국, 협조 73개 실국)

《평가대상 주요사업》

- ◆ (복 지·문 화) 돌봄SOS센터 운영,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글로벌음악도시 조성 등
- ◆ (도 시·안 전)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영동대로지하공간 개발 등
- ◆ (경제·스마트) 제로페이 활성화, 도시공간정보 3차원화, 민방위 전자고지화 등

2 협치역량평가

▶ 시민의 시정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치 평가제' 도입

※ '20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 통해 시장표창 수여 등 포상

- 민선7기 공약 「협치역량 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반영('19.2월)
 - 마을공동체 사업, 찾동 2.0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위해 '협치 친화적 성과평가제' 도입
- 협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자문단 운영('19.3~10월, 총 11회 자문회의)
 - 전문가·시민단체 등 총 11명(외부9, 내부2) 구성, 평가체계 설계·지표개발
- 협치역량평가 우수부서 선정
 - 협치계획(목표, 수립과정), 결과(기반조성, 실행, 성과, 만족도) 등 2개 분야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선정

□ '20년 추진 계획

- '19년 협업우수기관평가 시범운영 결과는 기관평과에 반영·포상
 - 17개 사업 중 총 4개 선정, 2월 기관평가 시 최대 3점 반영·포상금 지급
- 협업우수기관평가 시범운영 분석결과 토대로 '20년 평가제도 개선
 - 협업과정, 협업효과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협업성과 유도
- 협치역량평가 기본계획(안) 실국 의견 수렴 및 계획 확정
 - 평가 지표(안)·체계 등 실국 의견조회(~2월) 거쳐 기본계획 마련(3월)
- '20년 상반기 중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추진
 - 상반기 평가에 대한 피평가부서 의견수렴, 보완 등을 거쳐 기관평가에 산입 검토

□ 향후 일정

- '19년 협업우수기관평가 시범운영 포상·'20년 계획 수립 : '20.2~3월
- '20년 협치역량평가 기본계획 수립·상반기 시범운영 : '20. 상반기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③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④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운영

1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4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추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제도 및 규제를 발굴·개선

□ 추진 방향

- 지역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시민이 생업과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규제를 발굴·건의
-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개선

□ '20년 추진 계획

①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특화산업 선정) 지역 혁신성장 대표산업을 **규제개선 특화분야**로 선정
 - (선정기준) 규제 체감도가 높고 스타트업 등 창업에 영향이 큰 분야 선정
 - (특화분야) 퍼스널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AI 등
- (핵심규제 발굴) 특화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규제 발굴**
 - 산업별 협회·단체 및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우선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
 - 최근 3년간 건의된 미해결 과제 중 혁신성장을 위한 선결과제 지속 발굴
 - ※ 서울지역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산업입지법 제7조의2 제2항) 폐지 등
- (해결방안 마련)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마련**
 - 해당분야 전문가·현업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안 마련
 - 해결방안 마련 단계부터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건의 수용률 제고
- (건의 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건의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을 제고**
 -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제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조정하여 건의
 - 정부부처 외에 국회사무처, 지역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을 통해서도 건의

②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 정비대상: 市 조례·규칙 등록규제 129건

— 등록규제 총 412건 중 '10년 이전에 등록된 129건 우선 정비

※ 등록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관리하는 조례·규칙상 규제

○ 조례·규칙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 정비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제·개정 시점이 오래되어 내용·대상·범위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규제 개선

○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



③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서울시민 규제발굴단」과 함께 경제활동 걸림돌 규제 발굴

— 4차 산업, 제조업, 건축, 환경 등 6개 분야 현업종사자 20명 이내 위촉('20. 3월)

— 규제개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교육 실시 후 분야별 활동

— 발굴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완하여, 정부 등에 건의

○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통해 생활현장의 민생규제 발굴('20. 8월)

— 주거, 교통, 복지, 안전 분야 등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 규제를 발굴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 증액(2백만원→5백만원)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향후 일정

○ 서울시 규제개선 특화분야 선정 및 핵심규제 발굴 : '20. 3~4월

○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 3월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비대상 등록규제 심사 : '20. 4월~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사업 개요

- 사업명: 행정심판위원회 운영('20년도 예산: 294,464천원)
- 심판위원: 정원 50명/현원 39명(외부 34명, 내부 5명)
- 회의운영: 연간 24회 개최(매월 2회)

행정심판 운영 실적 (2019년, 단위: 건)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1,609	348(21.6%)	837(52%)	424(26.4%)

□ '20년 추진 계획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사건 **재결기간 단축 노력**
 -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의 위원회 신속 상정
 - 일반음식점 등 민생 관련 사건의 처리기한 단축으로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민생사건 평균 재결기간	85.7일	84.9일	84일(0.9일 단축목표)

-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구술심리, 현장조사 실시 확대**
 - 청구인의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 적극 활용
 - 서면자료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당사자간 다툼은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 실시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국선대리인 제도('19. 3월 시행) 인지도 확대를 위해 주민접점장소 중심 홍보 실시
 - ※ 국선대리인 선임실적('19. 3. 6.~'20. 2. 14.): 신청 18건, 지원 12건

□ 향후 일정

- **행정심판 및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 배포** : '20. 5월
 - 홍보 리플릿(1만부)을 제작하여, 시 및 자치구 민원실, 산하기관 등 비치

3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행정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상위법령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 정비
-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실무자 교육 추진

□ '20년 추진 계획

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실무자 역량 강화

-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장/연기 등의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
 - 상위 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행안부의 표준 시행규칙안을 참조하여 제정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교육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와 자긍심 고취
 - 연 2회 납세자보호관 교육 실시(상반기 1월 기 실시, 하반기 9월 워크숍 예정)
 -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무교육에 활용

②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시민생활 속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 공공장소 전광판, 교통방송, 시·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 납세자보호관 활동 관련 우수·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 공동으로 권역별 홍보 진행
 -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 자료, 상가 게시판 등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홍보 진행
- ※ 구청, 주민센터, 시금고 지점 등에는 포스터(1,800매)와 리플릿(121,000매) 배포 완료('20.1월)

□ 향후 일정

-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20. 3월
- 시·구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개최 : '20. 9월

4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운영

안정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익변호사를 확충하고, 공익변호사의 시정 활동영역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지원 도모

□ 공익변호사단 개요

- 정 의: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와 다양한 시정에의 법률전문가 참여를 통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변호사 인력풀
- 인 원: 1,026명
- 활동분야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 운영	사이버 법률상담	이웃분쟁 조정센터	시정 활동
목 적	대시민 법률서비스 체계적·지속적 지원 전문 법조인 사회 공헌 참여			이웃 간의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지원
대 상 시 설	25개 자치구 모든 동주민센터 424개	시청 별관1동	사이버 상담	시청 별관1동	서울시 전 부서
운영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4회)	매일	매일	수시	수시
운영 방법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 방문 상담	매일 4명 변호사 방문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문제 상담	조정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웃 간 갈등 해소	서울시 주요사업에서 활동
활동인원	848명	1,026명	157명	19명	100명

□ '19년 주요 추진실적

- 모든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2명 배치를 통한 상담 이용률 제고

- '18년 매월 평균 공석 10개 → '19년 12월 공석 0개
- '18년 상담실적 14,606건 → '19년 15,815건



- 서울시 주요사업 법률지원 활동 등 서울시정 지원

- 시정 활동: '18년 591건 → '19년 1,083건

-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원활한 이웃간 분쟁 조정 지원

- '18년 조정진행건수/진행율 97건/35% → '19년 118건/41.7%

□ '20년 추진 계획

- 공익변호사단 신규 모집으로 **안정적 시민권의 보호 토대 조성**
 - 모집인원: 200명
 - 모집공고: '20. 2. 3.(월)~2. 7.(금)
 - 징계사실조회(서울지방변호사회): '20. 2. 10.(월)~14.(금)
 - 활동개시(활동 매뉴얼 배포): '20. 3월 초~
- 마을변호사 추가배정을 통해 **골고루 누리는 법률서비스 추진**(848명)
 - 권역별 2개소 주말·야간 상담실 확대 운영(10개소)
 - 월 2회 이상 정기상담일 운영 동주민센터 212개소('19년 177개소)로 확대, 지역간 편차 해소 추진
- **친절한 상담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
 - 마을변호사 활동 매뉴얼에 상담미담사례 및 친절교육 자료 수록·배포
 - 위촉식 및 표창장 수여식 등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친절교육 진행
- **더 편안하고, 더 빨라지는 시민법률상담실·사이버 상담실 운영**(1,026명)
 - 시민법률상담실 변호사가 친절히 응대하도록 안내 및 상담 모니터링, 만족도 평가
 - 사이버상담은 4일 이내('19년: 5일)로 답변시간을 단축하여 상담 만족도 제고
- 공익변호사의 **시정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권의 보호 및 서울시정 적극 지원**(120명)
 - 전문적인 청문주재자 풀(Pool)을 구성하여 시민권을 보호하는 청문주재(20명)
 -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위원회에 공익변호사가 참여하여 주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서울시 각 부서에 공익변호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향후 일정

- 공익변호사 각 부서 지원 안내 : '20. 3월초
-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배정 : '20. 3월~12월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②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

③ 2단계 재정분권 적극적·체계적 대응 추진

④ 서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

⑤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⑥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

⑦ 투자·출연기관 조직문화 개선방안

1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시민이 재정 투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감소**로 재정운용 선순환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서울경제 둔화에 적극적 대응**
- 시민체감형 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적기 재정집행**을 통한 조기 성과창출

□ 추진 목표 및 실적

- 상반기 목표 : **65.0%**(신속집행 대상 24조 610억원 중 15조 6,397억원)
- 집행 실적('20.2.17. 기준) : **11.2%**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집행액	집행실적 ('20.2.17.)
		대 상	제 외*		
市(본청)	41조 5,459	24조 607	17조 4,849	15조 6,397 (65.0%)	2조 7,048 (11.2%)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20년 추진 계획

① 주요사업 집행 중점관리

- 일자리 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집중관리**
 - '20년 일자리 예산액(2조 697억원)의 **상반기 68%** 집행을 목표로 뉴딜·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의 **모집일정 단축 및 홍보강화**를 통한 조기집행 추진
- 대규모 투자사업(50억원 이상) **조기추진을 위한 집행실적 중점관리**
 - (사업부서) 월간 집행계획 수립 및 부진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제출 등
 - (기 조 실) 주간 집행실적 점검 및 공표, 부진 실·본부·국 추진 독려 등

② 자치구 지원예산 신속교부

- 자치단체 보조금은 1/4분기 내 40%, 2/4분기 70% 이상 조기 교부
 - 자치단체 보조금 신속집행 목표액 5조 1,133억원중 상반기 3조 5,793억원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자치구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상반기 67% 신속 교부
 - 20년 2조 9,582억원 중 1조 9,820억원 상반기 교부 (매월 20일 교부중)
- 시 재배정사업도 재배정과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공정진행 및 집행상황 수시관리

③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기획조정실) 집행실적 관리 및 평가, 집행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수시 점검회의 개최, 신속집행 실적 평가하여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협조사항 적극 발굴하여 장애요인 개선건의 등
- (재무국) 안정적 자금 확보 및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부서 지원
 - 세입징수전망, 실제 지출 가능한 자금현황 파악하여 차질 없는 자금운용
 - 입찰 공고기간 단축,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행안부 신속집행 지침 적극 활용
- (행정국) 자치구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지원
 - 자치구별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공정진행 점검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개 및 추진 독려

□ 향후 일정

- 집행실적 점검·공개 및 점검회의 개최 : '20. 2 ~ 6월
- 상반기 신속집행 기관 성과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 '20. 7월

2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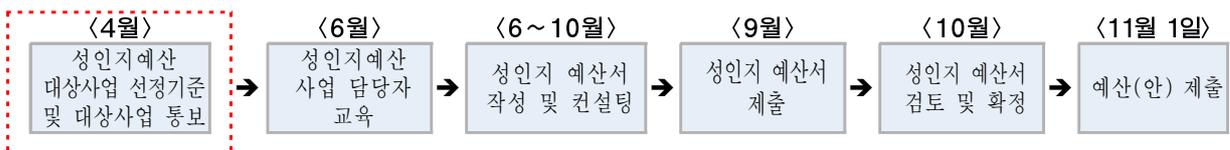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인지예산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성평등 인식 제고

□ 추진 방향

- 성별수혜 분석이 용이하고 성 불평등 개선 여지가 큰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수용성 제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밀착 컨설팅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인지예산서 질 제고

□ '19년 추진 실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체계화
 - 전문가 및 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사업 구조조정('19년 373개 사업 중 118개 제외)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시범적용하여 신규 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 품질 제고를 위한 일정 조정
 - 성인지예산서에 관심과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서 작성 조기 착수(7월→4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 실시('19.6.20.(수), 26.(수), 27.(목) 총 3회 실시)
 - ▶ 주요 교육내용 : 성인지예산의 개념, 대상사업 선정 절차, 성인지적 분석방법 등
-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예산서 작성을 위한 밀착 컨설팅 실시(사업당 2~3회 실시)
 - ▶ 컨설팅 내용 :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작성내용 수정방향 제시

<'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

대상사업	사업수(개)	예산액(백만원)	구성비(%)
계	333	3,025,020	100.0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38	789,551	26.1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40	348,828	11.5
자치단체 특화사업	155	1,886,641	62.4

□ '20년 추진 계획

① 대상사업 선정기준 고도화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강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 선정
 - '20년도 시범적용한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본격 활용으로 사업 선정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실·본부·국에서 직접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관리 강화
 - 성별영향평가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선정을 위한 협의체(예산담당관, 여성정책 담당관, 젠더자문관, 컨설턴트 등) 구성·운영
 -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성인지예산서 필수 작성
 - 성별영향평가 조기 착수(5월('19년) → 4월('20년))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간 확보

②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사업담당자 밀착 컨설팅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市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방법 및 사례를 담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로 추진 중)
 - 성과목표, 성별수혜 및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등 성인지예산서 항목별 작성요령을 제시하여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산 이해도 제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강화 및 컨설팅 결과 수용도 제고
 -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 서면 컨설팅 양식 보완, 유선 및 대면 컨설팅 병행 실시
 - 컨설턴트가 사업담당자의 컨설팅 반영여부 지속 확인하여 컨설팅 실효성 제고

□ 향후 일정

- 성인지예산 운영계획 통보 및 대상사업 선정 : '20.4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정 : '20.6월
- 성인지예산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예산서 컨설팅 : '20.6월~9월

3 2단계 재정분권 적극적·체계적 대응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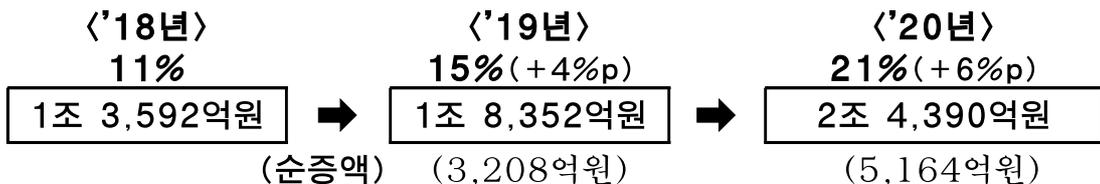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 재정 확충 및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 1단계('19~'20) 재정분권 추진성과

-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부담 지방전가로 자치와 분권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지만 **일정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로 인상(+10%p) ⇨ 8.5조원
- (소방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45%로 인상(+25%p) ⇨ 0.5조원
- (기능이양)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 지방이양 ⇨ △3.57조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수도권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분 중 35% 출연 ⇨ △0.42조원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에 따른 **우리시 재정확충 효과는 연간 1조 798억원 규모**
- 다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 법정 경비 전출 후 실제 순증액은 5,164억원 규모



□ 2단계('21~'22) 재정분권 추진동향

- 정부는 「재정분권 TF」 구성·추진안 검토중이며 **3월 중 국무조정실에 제출 예정**
 - (기재부) 지방교부세(또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포함) 전액을 지방분권세로 전환
 - (행안부) 법인분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지방세 전환
 - (자치분권위) 기능이양(균특회계, 자치경찰 등)과 연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시도협)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지방세 전환

□ 주요 추진과제

○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중 7:3 달성

- ➔ 지방소비세 · 법인분 지방소득세 인상, 기타 세목(주세, 종부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 지방이양 추진

○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 조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 ➔ 4대 기초복지사업* 등 국민최저보장적 사업의 국가사업화, 합리적 근거없는 기준보조율 차별 폐지 추진

* 4대 기초복지사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 ➔ 지방소비세 1:2:3(수도권:광역시:도) 지역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운영,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성 제기

○ 국가직화 소방직 인건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 ➔ 시도협과 공동 대응, 소방안전교부세율 추가 인상(기존 45% 외 추가인상) 등 국비 지원 건의

□ '20년 추진 계획

○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등 단기 중점 이슈에 대해 우선 대응하고, 장기 이슈는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적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 및 재정분권 TFT운영으로 '재정분권 로드맵' 수립 및 정부안 대응전략 마련(1월~)

- 정부 재정분권 TF 참여자, 재정전문가 등으로 「서울시 재정분권 TF(12명)」 구성·운영(1월)하여 서울시 재정분권 로드맵 수립 및 추진

- 「시도협 재정분권 TFT」 활용으로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

○ 재정분권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쟁점 이슈 제기 및 여론조성 추진(3월~)

- 전문가 릴레이 언론기고(연6회 이상) 및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5월)

4 서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

서울 강남북 지역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

□ 추진 방향

- 서울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의 안정적 추진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혁신 성공사례 공유 및 균형발전 방안 논의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 '주민 생활 밀착형 생활SOC 확충 사업' 중점 추진으로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

□ '19년 추진 실적

-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19.3.~ '20.4)
 - ※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위한 주민공청회·전문가 자문 실시('19.11~'20.2)
 - ▶ (건강·생활편의시설) 지역여건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 공급
 - ▶ (거주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지 격차 해소
 - ▶ (산업경제) 중심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기반시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지역 간 이동성 및 서비스 시설 접근성 개선
 - ▶ (교육) 시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고른' 교육 기회 제공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낙후 지역 우선 확충으로 균형발전 기틀 마련('20)
 - 옥인주거 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건립 등 28개 사업 570억원 국비 확보

□ '20년 추진 계획

-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와 연계된 주요사업 발굴·추진
 - 균형발전 핵심과제별 실국별 개별사업 선정·연차별 로드맵 작성('20. 3~4월)
 -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발표('20.6) 및 사업별 성과 모니터링('20. 7월~)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혁신사례 공유·확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 '20.7.2~7.3(2일, 예정) / 서울광장(박람회 전시)·다목적홀(토론회)
 -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 전시 및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 논의위한 토론회 개최
- 10분 동네 생활SOC·생활권계획 생활SOC 등 지역 맞춤형 생활SOC 추진
 - 정부·시·자치구 공동 협의,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20.3~10월)
 - ※ 저발전 지역 생활 SOC 사업 우선 확충 등 지역특성 고려 사업 선정
 - 실질적 균형발전위한 '생활SOC 사업' 모델 정립 등 가이드라인 마련('20.7~8월)

5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

□ 투자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자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19년 추진 실적

- 市 투자심사 : 총 217건, 총사업비 5조 4,040억원(총 8회 실시)
 - (심사결과) 적정 69건(31.8%), 조건부추진 103건(47.5%), 재검토 6건(2.8%), 반려 및 철회 39건(18%)
- 중앙투자심사 : 총 58건, 총사업비 8조 112억원(총 4회 실시)
 - (심사결과) 적정 3건(5.2%), 조건부추진 48건(82.8%), 재검토 7건(12.0%)

□ '20년 추진 계획

- 市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간단축을 통해 주요사업 신속추진 지원
 - 정기 심사(연 4회, 3,5,7,9월) 외 수시 투자심사 확대 운영
 - : 시 역점, 생활 SOC,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우선적으로 처리
 - ※ 정기심사 평균 75일 → 수시심사 40일 이내 완료로 사업 조기추진 동력 확보
- 지방재정 투자사업 담당자 업무 능력 제고
 - 인재개발원·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과정(기본·심화) 신설로 전문성 강화
 - : 기본(투자심사 개요, 타당성조사 등), 심화(경제성분석(B/C) 등)
 - ※ (서울공공투자센터) '20년 상반기 : 교육커리큘럼 마련, '20년 하반기 : 과정운영
 - ※ (인재개발원) '20. 5월 : 과정 신설협의, '20년 하반기 : 커리큘럼 마련, '21년 : 교육실시

6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

노동자이사제 도입('16. 9. 28.) 이후 만 3년이 경과한 바, 그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이사제 개선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운영성과) 노동자이사제 도입 이후 투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및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노사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됨
 - 설문조사 결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71%, 공정성 제고 57%,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 69%, 노사협력과 상생의 문화 확산 40%로 긍정평가
- (제도의 한계) 노동자이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권한 부족으로 경영진 감시·견제가 어렵고, 노동자이사가 특정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등 노사협력 저해 문제가 발생

□ 추진 경과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의견수렴(개선 회의 9회) : '19. 3~12월
 - 이사회 안건 부의권, 정보열람권, 별도 사무공간 제공, 현업 배제, 서울노동이사협의회 공식기구화 등 요구
- 노동자이사제 연구용역 및 토론회 : '19. 8~12월
- 노동조합협의회 의견수렴 : '19. 12월
 - 노동자이사 임명 후 노동조합원 신분 유지, 노동자이사 노사 참여 공식기구 설치 요구
- 사용자협의회 의견수렴 : '19. 12월~'20. 1월
 - 기관별 특성 고려해 지침의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조정, 이사회 운영원리 고려하여 노동자이사의 권한 재조정 등 요구

□ '20년 추진 계획 - 노동자이사 및 노사정 합의안

< 개선 방향 >

- 노동자이사제 전국 확산을 위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전파
 - 노동자이사의 실질적 활동여건 개선 및 권한·책임 강화
 - 지속적 협의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 전국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노동이사제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노동자이사, 노조위원장, 기관장, 공무원, 외부전문가)
 - 역 할 :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전파·홍보,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정책 자문
 - 권한·책임 강화 등 노동자이사 제도 개선
 - (권한강화) 관련부서 통한 이사회 안건 제출 기회제공 및 정보열람 권한 부여
 - (책임강화) 각 노동자이사에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를 부여하고,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처분 근거를 조례에 명시
 - 현직 노동자이사 활동지원 및 역량 강화
 - 인권, 윤리경영 등 노동자이사 역할 수행에 지장이 적은 적합직무를 개발
 - 관련법규, 갈등조정 등 실제 이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 노동자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의 전국 확산 노력
 -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와 전국 단위의 총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에 입법 건의
 - 노동자이사제 백서 제작 및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해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확산

□ 향후 일정

-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 개최 : '20. 3월, 11월 (2회)
- 노동자이사제 백서 제작 및 배부 : '20. 4~6월
-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 구성 : '20. 9월
- 국제 노동자이사제 포럼 개최 : '20. 10월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확대 개선

□ 추진 방향

- 수평적·민주적 조직문화 구축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 직원 근무여건 및 후생복리의 전반적 개선 통한 경영성과 제고

□ 개선의 필요성

- 여성 및 청년 직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직원 처우개선 요구도 증대
 - 육아·돌봄 정책에 민감한 여성 직원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청년 직원의 비중 증가로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확대
 - ※ 여성 직원 : ('18) 4,728명 → ('19) 5,327명 → ('20) 5,826명
 - 청년 직원 : ('18) 4,055명 → ('19) 5,295명 → ('20) 6,082명
 -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상체계, 신뢰체계, 자아실현 등에 중점 개선필요
 - ※ 보상체계 : 보수를 비롯한 금전적 만족도, 승진·인사 등 비금전적 만족도
 - 신뢰체계 : 조직 및 동료에 대한 신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 자아실현 : 개인에 대한 존중, 업무에 대한 재미, 자부심
- 투자·출연기관의 규모나 재정상황에 따라 복리후생제도의 편차가 큼
 -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직원 대상 복리후생제도가 다양함
 - ※ 복리후생 제도 : 교통공사 17개, 농수산공사 16개 vs 사회서비스원 1개, 장학재단 0개
 - 소규모 출연기관의 경우 소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재정적 부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20년 추진 계획

- **숏투자·출연기관 차원의 조직문화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수립**
 -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조직문화 및 후생복지 개선'에 대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
 - * 투자·출연기관의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용역
 - ①공정·투명한 인사제도 구축 등 보상체계 개선, ②소통·협력 강화 등 신뢰체계 구축, ③후생복지·근로조건 개선 등 자아실현 지원 중심으로 개선방안 수립
- **조직문화 관련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 확대·개선**
 - 현재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 배점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되,
 - * '기관장 리더십' 지표에서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대한 기관장 기여를 일부 평가
'조직관리' 지표에서 해당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노력 등을 일부 평가
 - 조직문화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지표 내용을 개선
- **소규모 투자·출연기관 후생복지제도 확대·개선**
 -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후생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관의 수요를 모아서 숏투자·출연기관 차원의 후생복지제도가 운영되도록 중개
 - 다만, 수요기관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예산은 직접 편성하고 공기업담당관은 해당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 긍정검토

□ 향후 일정

- 시민(직원)만족도 조사 용역 추진 : '20. 3~7월
- 조직문화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수립 : '20. 8월
- 투자·출연기관 후생복지제도 예산심사 : '20. 8~10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 '20. 8~10월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 ① 지속가능한 상생교류를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
- ②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확대
- ③ 글로벌리더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 ④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로 세계도시 상생발전 기여
- ⑤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추진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 조성 및 강화

□ 추진 방향

- 지역 밀착형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통한 실질적 상생교류 협력체계 마련
-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약사업 준비를 통해 교류의 지속가능성 확보

□ '19년 추진 실적

- 교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 지자체 중심 교류협약 체결
 - 고성, 거제, 구례, 부여 등 16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경북·정읍·완주·진안 재체결)
 - 서울-타 지자체 MOU 체결현황('19년말 기준) : 총 64건(광역 13, 기초 51)
- 사람·정보·물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추진
 - '지역 연계형 청년 일자리', '찾아가는 혁신로드' 등 교류 다각화 및 사업내용 심화

□ '20년 추진 계획

- [협약체계] 지속가능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방식 개선
 - 협약갱신제(4년 단위)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류사업 개편
 - 민간단체, 협의회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협약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 [사업관리] 지방의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교류사업 발굴 및 체계적 관리
 - 정형화된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사업 발굴
 -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추진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교류사업의 지역 내 성공적 안착 도모
- [교류확산] 서울·지방 교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과 전국 확산
 - 서울시·지자체·민간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합동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및 공유
 - 성과분석 결과 및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교류내실화

□ 향후 일정

- '20년 우호교류협약 추진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 '20. 2월~

2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확대

우리시 혁신정책을 타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유 및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돕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

□ 추진 방향

- 단순 현장방문이 아닌 실질적 논의와 학습운동을 통해 서울정책 이해도 증진
- 혁신자문단(공무원·전문가 등)의 현장중심 컨설팅으로 지방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

□ '19년 추진 실적

- 「서울 혁신로드」 연수 참여(지방→서울) : 총 231팀, 5,524명 참여
 - 사업본격 추진한 '17년 이후 연평균 참여팀 30.8%, 참여인원 23.6% 증가
 - 정책입안 관련자(공무원·의원) 참여인원 비중 '17년 10.2% → '19년 28.2% 증가
- 「찾아가는 혁신로드」 정책컨설팅 시범운영(서울→지방) : 3개 지자체 추진
 - 목포시(도시재생2, 청년1), 포천시(도시재생4) 자문 완료, 괴산군(도시재생3) 추진중

□ '20년 추진 계획

- 「서울 혁신로드」 연수 참여 확대 : 목표 7,500명 ('19년 5,500명)
 - 외국인 공식참여 채널 개설, 참여율 저조한 지자체 대상 홍보 및 협조 강화
 - 방문장소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 다각화 및 새로운 정책장소 개발
 - 정책 연수 참가자 DB구축, 관심정책 이메일링 서비스 통해 재참가 유도 등
- 「찾아가는 혁신로드」 내실화 및 본격 추진 : 5개 지자체 ('19년 3개 지자체)
 - 지역민 토론회 등 실질적 지역수요 분석 후 전문가(혁신자문단) 컨설팅 실시
 - 지자체·지역청년활동가 연계 토크콘서트 개최하여 상호 상생 방안 제공 등

□ 향후 계획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수요 조사 : '20. 2~3월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사업 추진 : '20. 3월~

3

글로벌리더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 확대, 시정 연계 전략적 해외순방, 국가정상 등 해외 유력인사와 교류를 통한 市 도시외교 지평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 방향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 수도도시와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
- 자매·우호도시 확대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 '19년 추진 실적

- 전략적 중요도시와 우호도시 협약체결 : 3개 도시 ※ 총 71개 도시
 - 텔아비브(이스라엘, 5.6), 충칭(중국, 5.30), 메데진(콜롬비아, 7.12)
- 해외 순방을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도시간 협력 강화
 - 성공적 혁신 창업현장 및 도시재생 지역 방문('19년 1월, 선전·홍콩)
 - 혁신창업 전략 구상 및 환경문제 해결 모색('19년 5월, 아부다비, 런던, 텔아비브)
 - 지속가능한도시포럼, 세계도시시장회의 참석('19년 7월, 멕시코시티, 메데진, 보고타)
 - 스마트 도시·혁신창업 '서울세일즈' ('20년1월, 리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 해외 국가·도시의 날,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 등 개최·참석
 - 타이페스티벌(4.20~21), 아세안 위크(6.14~16), 페스티벌 인도네시아(9.20~22), 취리히 서울과 만나다(9.28~10.5), 서울-중국의 날(10.20) 개최 등

□ '20년 추진 계획

① 주요국가 수도도시와 공동현안중심 교류를 통해 도시외교 외연강화

- 코로나19 진정 이후 **중국도시와 관광·투자·의료 등 도시외교 활성화**
 - 제4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한 양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
 - 코로나19 극복관련 중국 도시를 응원·격려하고, 분야별 새로운 교류과제 발굴
- **2020년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 추진**
 - 주요도시 시장의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동력 확보

- 국가정상 등 해외 주요외빈 방문·면담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인사와 시장면담 및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親서울 국제인사 확대

②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 해외도시의 날, 자매·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 등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 서울-로마 자매도시 20주년 기념행사 등 도시간 상호 기념행사 개최
- 해외도시 초청공연, 해외도시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9월)
 - 시민들이 세계 각국 문화와 먹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글로벌 축제로 발전
 - ※ '19년 70개국 대사관 및 16개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공연단(256명) 참석



③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전략과제 수립

-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21-2024) 수립
 - 2017-2020년 도시외교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서울연구원)
 - 기후변화, 재난·감염병 등 도시간 공동대응 필요한 다자 도시외교 강화 및 도시교류와 정책수출의 전략적 연계 추진방안 등
-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회의 육성방안 연구
 - 市 주최 국제회의 현황분석, 국제적 브랜드 도약 및 국제어워드 연계 방안 등

□ 향후 일정

- 도시외교 기본계획(2021~2024) 수립 추진 : '20. 4월~
- 해외도시 문화교류(상시) 및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 '20. 9월

4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로 세계도시 상생발전 기여

서울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경험 공유 및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세계 도시문제 해결 기여

□ 추진 방향

- 교통, 전자정부 등 市 대표정책, 신남방·중남미 등 글로벌 전략지역 적극 진출
- 市·유관기관·민간기업 전방위 협력으로 우수정책 진출 시너지 창출
-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자원 유치

※ 소요예산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 1,619 백만원



□ '19년 추진 실적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진출사업 민관협력 추진(총17건 수주)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간선급행버스체계 4단계 실시설계 및 감리
 -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비위생 매립지 개선 예비조사 등
- 국제평가상 참가, 유관기관 정책공유 채널 등을 통한 진출기반 확대
 - UN공공행정상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저소득 여성 건강지원사업) 수상('19. 6월)
 - 민관협력 해외진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19.7월, 11월)
 -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정책공유 워크숍 등 추진(7회, 700여명)

□ '20년 추진 계획

- 중앙정부, 국내외 공적개발원조기관 **재원 확보 및 정책진출사업 추진**
 - (KOICA)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
 - (기재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정책자문 등 2건
 - (수출입은행 등) 니카라과 마나과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 등 3건
 - ※ (유형별) 컨설팅·교육(4건), 시스템 구축(4건)
 - (분야별) 교통(4건), 전자정부(1건), 스마트시티(2건), 주택(1건)

- 우수정책 진출 효과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발굴·기획을 위한 분야별 민관협의회 확대 운영(3개→5개분야, 분기별1회)
 - 5개 분야 : 전자정부, 교통, 상수도 + 환경, 도시개발('20년 상반기 추가 구성)
 - 민간기업,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6월, 11월)

-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해외도시 정책진출 기회 모색**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여를 통한 市 우수정책 공유(5월)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MOU체결로 동유럽 지역 협력확대('20년 하반기)

- 도시간 정책공유 확대를 위한 **'세계도시정상회의' 참가 및 포럼 개최 준비**
 - 싱가포르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가, 市 우수정책 홍보 및 공유('20.7월)
 - 리완유상 수상도시로서 '세계도시 정상회의 시장 포럼' 개최('21.7월) 준비

□ 향후 일정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 및 추진 : '20년 1월~
- 다자개발은행 정책공유 행사 추진 : '20년 5월
-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 '20년 6월, 11월
- 싱가포르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가, 市 정책 홍보 : '20년 7월

5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기구 유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

□ 추진 방향

-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 조성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로 국제 어젠다 선도 및 도시 문제 공동 해결
 - ※ 소요예산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 3,953 백만원

□ '19년 추진 실적

-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규 유치
 - － 농림부 협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 유치·개소('19.5월)
 - － 환경부 협력 ‘세계보건기구(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유치('19.10월)
 - ※ 서울 소재 국제기구 38개(UN 및 정부간 기구 20, 준정부·도시간 기구 10, 국제NGO 8)
- CityNet, WeGO 등을 통해 세계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 CityNet 교통, 기후변화 등 정책공유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총5회)
 - － WeGO 스마트시티 정책공유(총10회) 및 시범사업추진(우간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 '20년 추진 계획

-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서울연락사무소 유치 : '20년 하반기
 - － UN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접근성 및 진출 기회 확대
 - ※ 기능 : UN 및 산하기구 사업을 위한 조달·구매 관련 업무, 대북한 유엔기구 프로젝트 지원 등
- 환경, 교통,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 사업 추진
 - － 세계지방정부연합(8월), 세계대도시협의회(10월) 등 참여 국제 아젠더 논의
 - － WeGO-아세안 스마트시티 워크숍(6,8월), CityNet 환경정책 교육 추진(9월) 등
- 국제기구 안정적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전용공간 추가 확보
 - － 예산절감 가능한 기부채납시설 우선 검토(용산구 문배업무지구)
 - － 글로벌센터 인근(종로·중구 중심) 후보지 병행 검토('20년 상반기)

별첨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9	54	33	2	-
	시정·처리요구사항	44	22	22	-	-
	건의사항	17	4	11	2	-
	기타(자료제출 등)	28	2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 관련 기금활용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국제교류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 중 5년이상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예산으로 전환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사업 전환대상 사업 조사(2019.10월) - 기금사업 전환 검토회의 개최(2020.1.17.) ※ 일반사업 전환 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상 문제점, 극복방안, 장단점 분석 후 추진 <table border="1" data-bbox="576 1003 1453 1218"> <thead> <tr> <th></th> <th>부 서</th> <th>사 업 명</th> <th>최초년도</th> <th>전환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울시립대학교</td> <td>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td> <td>2013</td> <td>검토중</td> </tr> <tr> <td>2</td> <td>인재개발원</td> <td>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td> <td>2008</td> <td>검토중</td> </tr> <tr> <td>3</td> <td>도시철도계획부</td> <td>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td> <td>2013</td> <td>검토중</td> </tr> <tr> <td>4</td> <td>보건의료정책과</td> <td>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td> <td>2011</td> <td>전환예정</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부서별 자체예산 편성 : 2020년 7월 		부 서	사 업 명	최초년도	전환여부	1	서울시립대학교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2013	검토중	2	인재개발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2008	검토중	3	도시철도계획부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2013	검토중	4	보건의료정책과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2011	전환예정
	부 서	사 업 명	최초년도	전환여부																						
1	서울시립대학교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2013	검토중																						
2	인재개발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2008	검토중																						
3	도시철도계획부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2013	검토중																						
4	보건의료정책과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2011	전환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관련, 빠른 시기에 확정하여 그에 걸맞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리 주체의 학습과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준) 대상사업 확정(10월) → 예산서 작성(10월) - (개 선) 대상사업 확정(6월) → 교육 및 컨설팅(6~10월) → 예산서 작성(6~10월) ○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일시 : '19.6.20.(목)/6.26.(수)/6.27.(목) 총 3회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인원 : 30개 실·본부·국 115명 - 교육시간 : 매회 2시간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서식 이해 ▶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주요 착안사항 교육(성인지통계 활용법,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수립 방법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20.5~6월 ○ 성인지예산 담당자 교육 : '20.6월 ○ 성인지예산 작성 및 컨설팅 : '20.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및 대면컨설팅 실시 ○ '21년도 성인지예산서 제출 : '20.1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민간위탁 사업평가 시 지적되는 특정 단체만 진입하는 문제, 고용승계 의무 위반 등 사례들을 모아 조치방안 강구 필요, 또한 민간위탁 준칙사항을 계획, 조례 부칙 등에 나열하여 위반시 민간위탁 수행업체에 대한 제재 등 방안 마련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재정·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공문 시행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 종사자의 고용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용승계 80% 의무조항 악용방지를 위해 고용승계 예외조항을 구체화하여 지침에 마련하겠음 ○ 또한, 수탁기관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참석토록 조치하였으며, 청렴교육 실시 결과도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반영토록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음('20.1.~) ○ 향후 위반사례 중심의 민간위탁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가 의견 수렴) : '20년 상반기 ○ 수탁기관 종사자 및 주관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인재개발원) : '20.4 ~ 10월(연4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 소관이 기획조정실(협력상생담당관)에서 경제정책실(지역상생경제과)로 이관되었는데 업무 소관을 빠르게 정리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함 (추진: 협력상생담당관, 협조: 지역상생경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간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교류업무 추진중 - 기획조정실(협력상생담당관) :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역할로 사업의 성과관리를 담당 - 경제정책실(지역상생경제과) : 경제분야 지역상생사업(일자리, 상생 플랫폼, 직거래장터, 귀농귀촌 등) 단위사업 추진 <p>※ 조직개편(2019.1.1.자)으로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지원」 소관업무 0편에 따라 해당인력 (3인) 및 관련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역상생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간 적극 협력 및 소통체계를 구축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순환근무는 시민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움. 3년 이동 제한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전보에 따른 직무 전문성 약화 방지 등 위해 정기인사를 연2회 → 연1회로 축소·운영해왔으나('13~'17) ○ 전보기회 확대 및 순환전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2회 정기인사 실시(전보기준선정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인사 연1회(상반기) → 상·하반기 정기('18~) - 현 부서 7년 → 동일 실·본부·국 7년 이상 근무자 전보 - 선호-기피부서 순환 및 지원-사업부서 간 우수 인력 균형 배치 ○ 단, 현재도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u>현 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u> 희망전보를 실시하고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 고충이 반영된 경우 예외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연속성, 전문성 등 고려해 향후 전보기준 수립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직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기획담당관,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기획조정실 자체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직원 외부강의 전수조사(201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17~'19년) 사례 조사 결과, 직무연관성 없이 출장처리하고 강의하거나, 청탁금지법의 상한을 넘는 강연료를 받은 경우 등 비위사례는 없음 <p>(기준 마련 및 서울시 전체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기준 : 기 마련된 행동강령·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시규칙 제4229호,2018.8.2.) -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8.10.12.) ○ 외부강의 관련 점검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1. 8~21.(2주)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 점검 - 2019. 8. 5.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관련 안내 공문 시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20.5.27. 공포·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사항 점검: '20년 상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단순 시설 관리와 사회적 경제 사업과 같은 가치지향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협약서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음. 민간위탁의 유형을 시설관리, 용역관리, 가치지향적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담는 등 계약서를 개선하여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고의·악의적 비위에 대해서에서 감사·조사를 통해 걸러내는 등 민간위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고민해 주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을 사무형, 시설형, 수익창출형 외 가치지향적 위탁사무(중간지원조직형)로 구분·관리하고, 민간위탁사무 유형에 따라 맞춤형 표준협약서와 성과지표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지향적 위탁사무(중간지원조직형) 성과지표 개발('16.3.) ○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탁사무감사·평가활동' 지속적 실시 추진 중(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6.~)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협약서 개정(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20년 상반기 ○ 수탁기관 종사자 및 주관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인재개발원) : '20.4 ~ 10월(연4회)
<p>8. 2020년 예산안에 명시이월 금액이 과다함.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 관리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명시이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제출 : 201개 사업, 1조 3,317억원 - 최종 의회승인 : 209개 사업, 1조 3,452억원 - 명시이월 확정액 : 205개 사업, 7,82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 명시이월(3,040억원)에 따라 '18년 명시이월 확정액(5,387억원)에 비해 2,435억원 증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를 통한 이월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 '20. 1월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국 점검회의 : '20.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정례간부회의 활용 ○ 집행 부진사업 감추경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숙의예산제를 시행 예정인데, 주민 대표성과 의회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바람 (시민숙의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숙의예산시민회를 관련분야 활동 시민과 일반 시민 비중을 5:5로 하여 구성하여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집중 숙의대상 사업을 선정, 숙의·공론을 시행한 후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 온라인으로 숙의할 수 있는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으로 일반시민 1,000명)하여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시 전문가, 시민 및 단체 외에 시의원(2명) 참여 등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완료(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 이와 아울러 시민숙의예산(숙의형) 개선방안 및 자문 등을 위한 숙의예산지원협의회에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의회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 20년에 시민숙의예산(숙의형) 5,300억원 규모를 운영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수립 완료(20.1.3)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예산시민회 및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 2020년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이후 실행과제와 추진실적이 기관 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추진실적 관리와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15개 실행과제 중에서 141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73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1개 과제가 시기 미도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인 73개 과제는 계속사업 또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 시기 미도래 과제 1개는 광화문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市 광화문추진단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 ○ 공기업담당관에서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실행과제의 추진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 과제를 보다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공문 시달(공기업담당관-9745)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실행과제 이행 여부 점검 : '20.6월 / '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사정변경(컨설팅 '16년 종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행과제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과제 일몰 여부 재검토
<p>11. 잠실대교 남단, 잠실새내역 부근 직장 통근버스가 진출입 하는 곳의 자전거 도로가 끊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임. 교통정책실, 관할 경찰서,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바람 (자전거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잠실동 주공5단지 앞 잠실대교 남단 부근 ○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폭1.2m, 35m, 보도높이형) 설치 - 횡단도 설치 1개소 - 가로수 이식 : 교목 6주, 관목 40주 ○ 사업기간 : '19. 6월~12월 ○ 사 업 비 : 10백만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자치분권자문관 근태 관련하여 근무일지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매우 단순하고 빈약함. 조치 바람 (협력상생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자문관 근무상태 관리 개선 : '20.1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치분권 정책 기획 및 조정, 분권제도개선 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역량강화교육 기획·자문 등 활동 내용을 일일 근무 일지에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② 자문수당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자문관 근태관리 강화방안 시행 : '20. 1월 ~ ※ 자치분권자문관 업무이관 예정 (협력상생담당관 → 조직담당관) : 2월중
<p>13.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인 교통방송은 BSC지표에 재무관련 지표가 없는 등 BSC 평가지표가 부적합하고, 고객만족도도 낮음. 또한 운영위원회를 1년 1회 개최하는 등 임원에게 책임감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완방법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C 성과관리는 전략목표, 주요사업, 핵심성과지표의 설정 적정성, 달성도를 평가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상반기, 교통방송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무관련 사업과 지표를 추가하였음 ○ '19년도 이후 책임운영기관의 고객만족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음 ○ 향후, 책임운영 기관의 경쟁력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운영회의 개최 예정('20.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서울연구원 수탁 연구 과제와 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중 중복 수행을 하고 있는 사례 집중 점검 필요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추진 전,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유사·중복여부 검토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학술용역 의뢰부서 사전 검토(타기관 시스템 활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DB를 통한 중복여부 확인 - (2단계) 조직담당관 사전 검토(서울시 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과제DB,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기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 - (3단계) 학술용역심의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활용 ○ 서울연구원 수탁연구과제 간의 중복수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기간 : '19.11~12월 - 점검 대상 : 최근 3년 총 140건의 수탁과제 ('17년 35건, '18년 43건, '19년 62건) - 중복점검 결과 : 중복수행 연구 미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키워드가 유사하더라도 과업 범위, 과업 내용, 과업 목적이 달라 중복연구로 판단되는 연구 건수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 학술용역심의 및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유사중복연구 검증 철저 : '20.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서울연구원은 중복 연구, 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지연, 구정연구단 관리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가 포괄임금제 운영이었는데,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도 2019년에 가등급을 받았음. 지도·감독 차원과 경영평가 반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추진 전,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유사·중복여부 엄격히 점검 : 시행중 ▶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탁연구과제 중복수행 점검 : '19.11월 - 점검결과 : 중복수행 연구 미발견 ○ (파견 연구원 관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법 위반여부 법률자문 및 구정연구원 처우 실태 파악 : '19.12월~'20.2월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및 감사) : '2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경영평가에서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하여 정밀하게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경영평가 최대 2점 감점 ※ 또한 차후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이행 시 최대 1점 감점 ▶ 필요시 2021년 연간 감사계획 반영 : '20.12월 ○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연구단 운영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방안 마련 : '20.5월 ▶ 중복연구, 국외 출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 상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6.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 처우 관련하여 자치구나 연구원에 만 맡기지 말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여 조치 바람 (추진: 조직담당관 협조: 서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연구원 처우 관련 법적 검토 및 실태파악 : '19.12월~'20.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연구단 파견근로자 처우 개선방안 마련 : '20.5월 이후
<p>17. 서울시립대 태양광 시설 관련, 담당 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의회에 인정해야 시정이 가능함. 그런데 시립대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과함. 기초실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추진: 조직담당관 협조: 서울시립대학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강화 및 철저한 자료 준비 당부 조치 (조직담당관-994, '2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대응 담당직원 자료작성원칙 교육 강화(연중 수시) - 부서장 검토 하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및 수합부서 확인 철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및 사전 검토 강화 : 연중 수시
<p>18. 서울시립대에 연한이 안 된 복사기 등 물품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관에서 조치 바람 (추진: 조직담당관 협조: 서울시립대학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환경정비 철저 요청(조직담당관-994, '20.1.21) 및 지속 독려 예정 ○ 시립대학교 자체 물품 활용·관리체계 강화('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행정망 “물품 사용전환 소요조회” 게시판 신설·운영으로 내구연한 미경과 물품 및 부서 미사용 물품 등 정보공유 - 건물별 물품관리 담당자 수시 점검 및 방치물품 즉시 시정 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 서울연구원의 현장 요구자료 제출이 미비했음. 연구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p> <p>(추진: 조직담당관 협조: 서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자체 조직개편 완료: :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대응 등 행정 분야 관리·운영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기획조정본부 → (개편)연구중심의 연구기획조정본부와 행정중심의 경영관리실로 분리 ○ 추가 진단을 위한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경영관리실 공동 TF 구성 및 TF회의시 서울시 참석 : '20.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에서는 연구기획조정본부·경영관리실 공동 TF를 구성하고 추가 자체 진단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의 부서·직종별 역할을 정립할 예정 - TF회의시 서울시도 참석하여 연구원의 시의회 업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관리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0.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금액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됨. 대책을 세워 개선해 주시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집행 강화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위해 '20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시세의 경우 '19년 징수 전망액을 기초로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시세 세입예산은 '19년도 징수전망액(19조 507억원) 대비 1% 증액한 19조 2,431억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당초 예산(17조 7,858억원) 대비 8.2% 증액 - 세출예산 집행을 제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단계에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편성 ○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전액 당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난년도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 전망을 통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 3,730억원 ○ 일반회계는 자치구 지원, 교육청 전출 및 타 기관 전출금 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연계되어 있어 미리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미반영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와 세목별 특성에 따라 주택가격변동 추이, 개별공시지가 변동, 과표신장률, 세율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 ○ 세출예산 불용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별 공정관리, 신속집행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정례간부회의시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1. 재정분권 1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권 관련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음. 앞으로는 서울시의 역할을 생각하여 의회에 보고와 협의를 요구함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19~'20)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정부의 추진사항은 지방세 확충 등 아래 4가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확충)지방소비세율 21%로(+10%p) 인상⇒8.5조 - (소방직 지원)소방안전교부세율 45%로(+25%p) 인상⇒0.5조 - (기능이양)국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 지방이양⇒△3.57조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수도권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분 중 35% 출연⇒△0.42조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에 따른 우리시 재정확충효과는 1조 798억원 규모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 법정경비 전출 후 실제 순증액은 5,164억원 규모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2단계 재정분권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T를 구성해 정부추진상황, 추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와 2단계 재정분권 논의 동향의 공유와 추진방향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TFT 회의결과 공유 및 재정분권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채무·부채 감축을 위해 SH공사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주택 사업시행 취지에 반할 수 있음. 무리한 채무·부채 감축으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시와 산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임 시부터 부채 중 이자 부담이 있는 채무를 집중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시와 산하기관의 재정은 완전히 별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채무증가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투입해야 하는 출자·출연금 규모를 증가시켜 시의 예산과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민생·안전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되, 시 및 산하기관의 통합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채무관리 계획 수립('2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현황 및 전망, '20년 시 자금수지 전망 - 지방채 발행 기본방향 및 세부 발행계획 - 지방채 상환계획 및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등
<p>23. 서울시에서 전기버스 선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적 손해는 차량생산업체와 버스 조합이 됨. 세밀하게 검토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버스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을 통해 전기버스 운영 확대로 시민 효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버스는 CNG버스대비 연간 1대당 CO₂ 68톤, 질소산화물 344kg 저감(주행거리230km)되어 운행 ○ 지원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외 전기버스 제조업체 경쟁을 유도하여 전년대비 차량도입 가격 절감(약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차량 평가시 평가위원회(버스조합 주관)를 통해 차량 납품가격 추가 협상 후 평가점수에 반영 ○ 운수업체↔차량제조사 구매계약 협상시 추가인하 협상 독려 (차량가격 추가 인하시 운수사에 일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버스 도입 확대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한 차량도입 비용 절감 추진 : '20. 5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4. 시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중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음. 중복된 내용도 있고 악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람 (시민숙의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민원성 신고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확대하는 등 시민예산성과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안전에 대해 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센터 공무원이 제안내용을 조사·확인 후 단순 민원성 제안은 즉시 이송 처리하고, - 중복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와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p>※ 2019년 운용결과 심사 : 94건('18. 3월~12월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검토 : 61건, · 실무 비검토(민원성·국민제안 이송 등) : 33건 · 심사제외(중복·취하·무관한 신고 등) : 14건 -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단순 신고에 대한 사례금 지급은 최소화할 계획임. <p>※ 2019년 심사기준 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기여도 점수 하향(35%→30%) · 노력·구체성 점수 상향 조정(5%→10%) · 실무검토 비대상은 최하 점수 하향 조정(50%→30%)하여 사례금(상품권) 지급 확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수립 : '20. 3월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5. 재정전략회의가 당초 명칭과는 달리 서울살림토론회로 운영되어 시민숙의예산 과정과 중복하거나 지속적 의미가 없는 것 같음. 검토해 주시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전략회의’는 민선7기 공약인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공약의 취지임 ○ 이에 따라, 당초 공약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市 재정운용의 방향을 시민과 관련 전문가, 시의회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 토론회’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서울살림토론회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2019.9.19.(목)/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참석자 : 시민, 전문가, 시의회, 공무원 등 ○ 내 용 : 서울시 재정운용방향, 예산편성 및 중점 자원배분 방향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면, ‘시민숙의예산’의 사업목적은 시민이 예산편성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공론·설계하는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예산운영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살림토론회와 사업의 목적이 서로 다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참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와 연계, 시민참여예산위원 참여 등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마당 총회(’20.8월) : 숙의예산 추진실적,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 추진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학교 회원 중 희망자 대상 연령·성별·자치구 균형 고려,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 이내로 구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시민포상금제도 관련 포상금 지급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확인되지 않은 공무원의 점심식사 업무카드 유용, 사업 불만 등 제도 자체 본래 취지와 달리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 많고 악용될 여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필요할 것임 (시민숙의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민원성 신고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확대하는 등 시민예산성과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안전에 대해 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센터 공무원이 제안내용을 조사·확인 후 단순 민원성 제안은 즉시 이송 처리하고, - 중복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와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p>※ 2019년 운용결과 심사 : 94건('18. 3월~12월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검토 : 61건, · 실무 비검토(민원성·국민제안 이송 등) : 33건 · 심사제외(중복·취하·무관한 신고 등) : 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단순 신고에 대한 사례금 지급은 최소화할 계획임. <p>※ 2019년 심사기준 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기여도 점수 하향(35%→30%) · 노력·구체성 점수 상향 조정(5%→10%) · 실무검토 비대상은 최하 점수 하향 조정(50%→30%)하여 사례금(상품권) 지급 확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수립 : '20. 3월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7.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등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기능은 시정고문단과 중복되며, 타 지자체와의 균형발전에 대한 자문 기능은 지방정부자치단체장 회의와 중복됨.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한 바 위원회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고문단과 정책특보단은 기능, 구성 등 서로 차별성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시정고문단은 시의 비전·전략 및 목표 등 거시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반면, 정책특보단은 시정의제, 지역상생 분야별 시민체감도 높은 정책개발 및 지자체간 상생 발전 등에 대한 자문 기능 수행 - (구성) 시정고문단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격 저명 인사로 구성된 반면, 정책특보단은 정책현장과 시정을 연계할 수 있는 현장 활동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고문단 및 정책특보단 운영 근거 조례 제정을 통한 자문기구별 정체성 명확화 : '20.상반기
<p>28.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등 자문위원회는 근거 법령 또는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도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구성원의 분야별 대표성 부족 등 구성원 선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함. 이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고문단 및 정책특보단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고, - 위원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문기능 수행 도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0.상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9. 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끝나기 전 언론의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설명회를 거친 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요약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 및 의회 제출 전에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개별 사업의 증감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유의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본부·국에 협조를 바탕으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0.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3조 넘음. 작년 2조 5천억원 정도 규모로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하지 않아 남는돈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임. 서울시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산집행을 잘 하지 못해서 쌓인 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잘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방채 발행만으로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함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집행 강화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위해 '20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시세의 경우 '19년 징수 전망액을 기초로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시세 세입예산은 '19년도 징수전망액(19조 507억원) 대비 1% 증액한 19조 2,431억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당초 예산(17조 7,858억원) 대비 8.2% 증액 - 세출예산 집행을 제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단계에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 편성 ○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전액 당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난년도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 전망을 통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 3,730억원 ○ 일반회계는 자치구 지원, 교육청 전출 및 타 기관 전출금 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연계되어 있어 미리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미반영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와 세목별 특성에 따라 주택가격변동 추이, 개별공시지가 변동, 과표신장률, 세율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 ○ 세출예산 불용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별 공정관리, 신속집행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정례간부회의시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1.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존재 함. 재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이지만 정작 운영에 있어서 자료를 하루이틀 전 긴급하게 배포하거나, 직접대면 없는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심지어 지방채,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2020년 예산안 발표 전까지 준비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음. 서울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 재정계획논의를 통해 현명한 재정계획·사용이 가능하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야할 것임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및 공사채 발행 등 심의안건의 특성상 사업부서의 수시 심의 요청 및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라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존 연간 안건 제출 현황을 파악하여, 심의회 개최 전 안건 담당부서와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최대한 대면심의를 진행하겠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2020.2.20.(목)/본청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15명) ○ 안건 :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div>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2. 서울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르면 예산안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참여예산 등으로 한데 묶거나 지나치는 등 조항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수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함 (예산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20년 예산편성 시 ‘시민숙의예산제’ 추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예산(’12년~)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시민제안형(참여예산) 700억원 편성 - 시민숙의예산(’20년~) :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시민숙의형 1,889억원 편성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3~4월 : 숙의예산제 추진 민·관 공동 회의(3회) ▶ ’19. 5. 16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제정 ▶ ’19. 5월~ :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6개 분야) ▶ ’19. 7월말 : 6개 분야 숙의예산(안) 선정 ▶ ’19. 11. 1 : 2020년 예산안 제출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분야 결정 및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 ’20.1~2월 ○ 숙의예산 사전학습 및 교육 : ’20.2~3월 ○ 분야별 숙의·공론화 실시 : ’20.3~7월 ○ 예산편성 및 확정 : ’20.8~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3. 마을변호사 제도가 실적 위주 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야간 상담을 검토하는 등 법률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직장인들을 고려한 야간 상담실 운영 계획수립('20.1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리동(동대문구), 신월1동(양천구) 등 2개 동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상담실 운영의 경우, 상담 공간의 야간 개방, 마을변호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여, 현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및 참여 희망동 수요 조사: '20.2~3月 ○ 야간 상담실 운영 확대: '20.4月~
<p>34. 동별 마을변호사의 실적의 편차가 존재함. 1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있고, 100건이 넘는 지역이 있음. 앞으로 세밀하게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기를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거주 인구 등의 차이로 인해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 수요 및 실적 편차가 존재함 ○ 동별 상담 수요와 타 동주민센터 상담시간 등 고려하여 정기상담일 횟수 차등 지정 운영 (월1회~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회 이상 상담실 운영: 총 178개소(총 41%) ○ 실적 저조한 동주민센터 현황 파악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 논의: '19.12月 ○ 홍보 강화로 마을변호사 인지도 제고 및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홍보 포스터·전단지 배포: '19.12月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담당등 실무 협의회 개최: '20.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부진한 동주민센터 의견 수렴 및 현황 파악 ○ 마을변호사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홍보 강화 : 연중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 광고판,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5. 서울시 행정소송은 주로 국토와 도시계획, 토지 수용, 영업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 3개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은데, 이런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해야 함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고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신규 위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토·도시계획 분야 29명, 토지수용 분야 32명의 법률고문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음(법률고문 현원 44명, 변호사 1인이 3종의 전문분야를 기재함) - 영업허가는 일반행정 사항으로 법률고문 전문분야로 분류할 실익은 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된 유형의 소송 승소율은 2019년 84.7%으로, 시 전체 승소율인 77.5%보다 7.2%포인트 높음 ○ 2020.1.1. 법률고문 3명 신규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3명 중 국토·도시계획, 토지수용 전문분야 2명 ※ 기타 1명은 전문분야로 조세, 복지, 국가배상을 기재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신규 법률고문 위촉시 특정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사건별 변호사 선임시에도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6.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징계가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감경 조건(현재 소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청 인용)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 필요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청심사는 외부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외부 5명, 내부 2명)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 중 ○ 다만, 소청심사 인용 의결 정족수를 강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19조가 개정 추진 중 (‘19. 11. 11. 의원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 취소(감경) 결정 시, “출석위원 <u>과반수의 합의</u>”(현행)에서 “출석위원 <u>3분의 2 이상의 합의</u>”(개정안)으로 의결요건 강화 ○ 개정법률안 관련 의결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우리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19. 12. 5.)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법률안 개정 관련 지속 협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7. 단순히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국제교류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기본계획(2021-2024)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기본계획(2021-2024) 연구용역을 통해 대륙별·국가별 자매우호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외교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시교류 추진 ○ 도시간 공동 관심분야 발굴 및 지속적 교류협력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우호도시와 서울시의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시장단 순방, 공무국외 출장, 국제회의 참가, 해외도시 대표단市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 교류협력 실시 ○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연수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장기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을 받은 외국공무원들이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자국 도시에 소개하고 전파하도록 유도 ○ 자매결연체결 기념행사, 문화공연단 파견 등 추진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2020.3월~ ○ 개도국 해외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 2020.1월~ ○ 개도국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 2020.3월~ ○ 해외도시철도공무원 초청연수 : 2020.6월~ ○ 자매우호도시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 2020.9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8. 우수정책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여러 사전작업은 충분히 되었으며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함. 컨설팅, 자문,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목표에 맞게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함. 또한 정책수출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수탁기관(SH)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컨설팅 등을 통해 구축된 사업기반을 토대로 후속사업을 개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80억) : 컨설팅(’18) → 시스템 구축(’20~’22) - 필리핀 세부 ‘교통현대화 사업’ (93억) : 타당성조사(’18)→ 시스템 구축(’21~’24)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60억) : 초청연수 (’18) → 시스템 구축(’21~’24) - 베트남 ‘스마트시티 구축’(105억), 미얀마 ‘지능형교통시스템’(90억) 등 신규사업 기획 중 ○ 또한,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사업체계 개선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고유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택도시공사+정책수출사업단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주택 등 해외사업 공동 협력 추진 (몽골 울란바토르시 공공주택사업 설계 및 감리사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적개발원조기관, 민간기업등과 협력하여 해외진출사업 지속 개발 및 신규 수주 추진 : ’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 : 에과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사업 등 8건 - 신규수주 : 니카라과 마나과 교통사업 등 10건 ○ 성과분석 및 용역실시 후 위탁방안 마련 :’20년 하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9. 전환 컨퍼런스는 서울연구원에서 예산을 시보다 2배 부담하고 있는데, 시장 요청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함. 독자적으로 고유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컨퍼런스는 조직신설 및 업무이관에 따라 '20년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전환도시담당관에서 단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신설('19년 7월) 및 컨퍼런스 업무이관 ('19년 12월) - '20년도 예산 : 285백만원 (전환도시담당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9월중 컨퍼런스 개최 예정 (전환도시담당관)
<p>40. 이웃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으로 종결한 건수가 많은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실적을 늘리는 방법 등을 검토 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절차의 인식전환 등 조정성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배포 등 기존 홍보 방식 외 언론사 홍보 기고, 유튜브, 팟캐스트 등 SNS 활용 등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서울시 공식 SNS 채널 활용 팟캐스트(11월) 및 유튜브 방송(12월) ▶홍보물 제작 및 맞춤형 대상 선별 배포(19년 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대상별 맞춤형 · 다각적 홍보 강화로 조정실적 제고 ○ '시민 가까이 찾아가는 조정실' 운영 등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1.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관련하여 상담변호사의 불친절, 무성의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친절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이나 지속적인 당부가 필요해 보임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상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취지 등을 담은 상담 매뉴얼 제공 및 마을변호사가 책임감·소속감을 갖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상시 요청 ○ 5주년 기념식 및 유공 표창식 개최: '19.1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자긍심 고취 및 격려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인터뷰 및 노하우 공유 ○ 주요 관계자간(서울시·서울시변협·대포 마을변호사) 문제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 '19.12月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변호사 간담회 개최시 친절한 상담 당부(서울변회) ○ 친절도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반기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2. 전국체전 피켓 도우미의 복장,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ARS 음성 등이 대부분 여성인 등 성인 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남. 실질적으로 행정과 현장에서 반영되는 성평등 정책 추진 바람 (여성정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학생·시민 등 성인지 교육 및 실천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3,595명('19년) - 마을 속 성평등학교 만들기 : 중고교 25개교, 31,411명('19년) -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활동 : '19년 4,585명('19년) ○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평등 관점 행사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전('19.10.4~11), 장애인 체전(10.15~20) - 피켓·시상요원 혼성 구성, 체전근무복 착용(짧은 치마, 하이힐 대체) - 성희롱·성폭력 종합예방센터 설치·운영(잠실올림픽경기장) - 체전 관계자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개·폐회식 감독관, 대행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개선 시행 : '20. 3월~ - 음성 등 안내방송 시 성평등 관점 반영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 이 학계에 편중되어 있음.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단 구성 시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796)」을 수립하였음 ○ 경영평가단의 특성 상 위원 구성이 학계에 편중될 수밖에 없으나,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성별·연령은 물론 장애인 등이 포함되도록 후보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단 구성 : '20.2월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4. 감사원에서 복수직급 특례제도, 용역계약업체 업무평가 잘못 등 지적사항으로 지방교부세가 벌점을 받아 감액됨. 관행 개선 필요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 수집 및 분석 - '15 ~ '19년 서울시(본청)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9년 교부세 감액 조치 금액은 평균 82% 감소하는 등 교부세 감액 건수 및 금액이 급감하는 추세이며, '19년은 감액 조치 건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603 734 1455 851"> <thead> <tr> <th>연 도</th> <th>계</th> <th>'15</th> <th>'16</th> <th>'17</th> <th>'18</th> <th>'19</th> </tr> </thead> <tbody> <tr> <td>감액 건수</td> <td>20</td> <td>1</td> <td>10</td> <td>4</td> <td>5</td> <td>0</td> </tr> <tr> <td>감액 조치 금액</td> <td>15,626</td> <td>5,219</td> <td>7,512</td> <td>2,363</td> <td>532</td> <td>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9년 지적유형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과 예산편성 기준위반으로 14,706백만원(94.1%) 감액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590 1070 1442 1308"> <thead> <tr> <th>지적유형</th> <th>계</th> <th>법령위반 과다지출</th> <th>예산편성 기준위반</th> <th>수입징수 태만</th> <th>보조금 부당지급</th> </tr> </thead> <tbody> <tr> <td>감액 건수</td> <td>20 (100%)</td> <td>11 (55%)</td> <td>4 (20%)</td> <td>4 (20%)</td> <td>1 (5%)</td> </tr> <tr> <td>감액 조치 금액</td> <td>15,626 (100%)</td> <td>7,282 (46.6%)</td> <td>7,424 (47.5%)</td> <td>473 (3.0%)</td> <td>447 (2.9%)</td> </tr> </tbody> </table> <p>※ 법령위반 과다지출 11건(7,424백만원) 중 계약 관련 규정 위반으로 5건(711백만원) 감액</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감액 조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감액 사례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 '20. 2월 - 서울시 전 부서 대상 공문 시행을 통해 교부세 감액 사례 공유 - 주요 감액 사유가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이므로 예산편성 및 계약 업무 전담부서에 감액 사례 내용을 포함·강화하는 교육 요청 공문 시행 	연 도	계	'15	'16	'17	'18	'19	감액 건수	20	1	10	4	5	0	감액 조치 금액	15,626	5,219	7,512	2,363	532	0	지적유형	계	법령위반 과다지출	예산편성 기준위반	수입징수 태만	보조금 부당지급	감액 건수	20 (100%)	11 (55%)	4 (20%)	4 (20%)	1 (5%)	감액 조치 금액	15,626 (100%)	7,282 (46.6%)	7,424 (47.5%)	473 (3.0%)	447 (2.9%)
연 도	계	'15	'16	'17	'18	'19																																		
감액 건수	20	1	10	4	5	0																																		
감액 조치 금액	15,626	5,219	7,512	2,363	532	0																																		
지적유형	계	법령위반 과다지출	예산편성 기준위반	수입징수 태만	보조금 부당지급																																			
감액 건수	20 (100%)	11 (55%)	4 (20%)	4 (20%)	1 (5%)																																			
감액 조치 금액	15,626 (100%)	7,282 (46.6%)	7,424 (47.5%)	473 (3.0%)	447 (2.9%)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응시요건 완화, 근무가능 지역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미달기관은 의무고용률 3.4% 달성 시까지 일반경쟁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 의무 선발(시장 요청사항-937)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결과 의무고용 미달기관 대폭 감소('18년 9개 → '19년 3개) ○ '20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지표의 점수를 대폭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 : '18년 0.5점 → '19년 최대 1.7점 - 출연기관 : '18년 0.5점 → '19년 최대 2.0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회의 통하여 지속 전과 : '20. 매월 ○ 경영평가 통하여 의무고용 미달 시 감점 : '20. 4~7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2. 산하기관, 공기업, 투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미달기관은 의무고용률 3.4% 달성 시까지 일반경쟁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0% 의무 선발(시장 요청사항-937)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결과 의무고용 미달기관 대폭 감소('18년 9개 → '19년 3개) ○ '20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지표의 점수를 대폭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 : '18년 0.5점 → '19년 최대 1.7점 - 출연기관 : '18년 0.5점 → '19년 최대 2.0점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회의 통하여 지속 전파 : '20.매월 ○ 경영평가 통하여 의무고용 미달 시 감점 : '20.4~7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2030서울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지역에 생활SOC사업이 적극 실행되어야 함 (도시계획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서울플랜」의 부문별 계획인 「2030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공급에 대하여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연차별·단계별 확보·추진할 예정 - '19년 5개 지역생활권의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으로 주차장, 공원 등 16개 생활SOC를 단계별 확보 추진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5월 : 15개 지역생활권에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부족한 생활SOC를 발굴, 단계별 시설 확충 예정 ○ '21. 3월 : 20개 지역생활권에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부족한 생활SOC를 발굴, 단계별 시설 확충 예정 ○ '22. 3월 : 22개 지역생활권에 실행방안 수립을 통해 부족한 생활SOC를 발굴, 단계별 시설 확충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4.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공사의 지하철 6, 7호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6,7호선 GS상가 406개소 명도완료(19.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미명도 상가(합정역 106호) 임차인 GS리테일과 전차인간 명도협의를 통한 명도완료 ○ 복합상가 추진시 제2임대차 사업 가능에서 위탁운영으로 임차인 책임경영(직영 및 위탁운영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경영 구현 <p>(예) 6,7호선 복합 문화·상업공간 임대차 사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위·수탁 운영 수탁자는 위탁자(임차인) 명의의 POS를 사용하여 매출이 임차인에게 발생하며, 임차인은 수수료를 제하고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백화점 방식의 판매위탁 운영)</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우대를 위해 10~15% 제2임대차로 운영하였으나, 6,7호선 GS상가 사례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고자 위·수탁 운영 추진 ○ 전대가능 상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 차임 지급 담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 전차인에 대하여 전대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 승인 (상가관리규정 10조 ②의 2) ○ 사업자가 전차인에게 수취하는 전대보증금은 해당 계약의 지급보증금액 및 비율의 범위 초과금지(상가관리규정 ②의 3)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상가 추진시 중·소 상공인의 경우 제2임대차 가능에서 위·수탁 운영(판매위탁)으로 지속적 확대 ○ 기존 전대가능 상가의 경우 계약연장 의사 없을 시 사전적으로 개별상가 입찰참가 유도를 통해 다른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사항	조치결과
<p>5. 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관리사 고용 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 하는 등 조치 필요 (복지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재가관리사는 저소득 재가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96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 현재 다양한 유사사업(장기요양, 노인돌봄) 실시로 일몰사업으로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관리사 64명(정년60세) 전원 정년 도래하는 '29년 사업 종료 ○ 사회서비스원은 재가노인돌봄 관련 '노인장기요양사업' 운영 중, 장기요양사업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 중('19년 120명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사업과 재가관리사 사업은 제공인력 자격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사업 인력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서울재가관리사 인력 : 자격 제한 없음 ○ (재가관리사 고용)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u>공개경쟁시험 응시 합격자에 한해</u> 고용할 수 있음(계약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지방출자출연법) ○ (정년연장)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에 의거 사회서비스원 포함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u>공동적으로 정년 만60세 적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만60세)로 정하도록 규정(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기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시험 실시 통해 채용 지속 : '20. 1월 ~

건의사항	조치결과
<p>6. 서울연구원, 시립대 관련 조직 진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자체 조직개편으로 행정대응체계 강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자체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 인력·조직 운영, 성과관리, 교육훈련 등 전반에 걸쳐 '서울연구원 중장기 조직운영 발전 방안 연구' 수행('18.12~'19.6)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기획조정본부→(개편)연구중심의 연구기획조정본부와 행정중심의 경영관리실로 분리('20.1.1)하여 시의회 대응 등 행정 분야 관리·운영체계 강화 ○ (시립대) 외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 및 인적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기능적합성, 유사중복성, 중요·수요도 등 분석 용역 실시 - 기구/보직별 기능/역할 명확히 정립, 적재적소 인력배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조직진단 용역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명 : 서울시립대학교 조직운동 개선 연구용역 ❖ 기간/예산 : '20.3~'20.9(7개월) 예정 / 99,000천원 ❖ 용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대 행정환경, 수요 변화 분석 및 전망 - 국내·외대학 조직 운영사례 분석 - 본부, 직속기관, 부속기관 등 기능분석 및 조직재설계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자체진단 및 부서·직종별 역할 정립 : '20.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획조정본부 및 경영관리실 참여 TF 구성·운영 ○ 서울시립대학교 조직진단 용역 실시 : '20.3~9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7. 학술연구용역을 그간 해당 업무를 오래하고, 시민과 소통해온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봄. 인센티브를 강화해 내부 직원 대상 공모사업을 모색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경비 지원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결과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상향조정 : 500만원 ⇒ 700만원(200만원↑) ▸ 각종 회의 및 출장 실시,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 재정지원 - 전직원 투표를 통한 우수성과 선정 및 공유로 시책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투표 우수작 포상으로 연구성과 긍정적 관심 환기 및 참여직원 격려 ▸ 우수성과 시 학습관리시스템 게재 및 전 실·국 공문 시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운영 개선 계획 수립 및 홍보 : '20. 2월 말 ○ 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공유 : '20. 10월
<p>8. 찾아가는 혁신로드, 혁신자문단 등 서울의 선진행정을 지방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기 바람 (협력상생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우리시와 참여 지자체간 소요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부담] 자문회의, 현지에서 필요한 차량지원 및 식비, 현지 개최 간담회 비용 등 - [서울부담] 자문회의 참석 및 현장방문 수당, 타운홀 미팅 및 토론회 개최 비용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의 정책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 찾아가는 혁신로드 지속 추진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9. 예산안 제출 및 발표 전에 기경위원장과 기경위원에게 사전에 협의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 '19.11. 1.(금)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 '19.10.30.(수) - 시의회 당정협의회 : '19.10.30.(수) - 시의회 의장단·대표위원·상임위원장단 설명회 : '19.10.31.(목) - 2020년 예산안 기자설명회 : '19.10.31.(목)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제출 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사전 설명
<p>10.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해 경제적 보상 외에도 승진 이나 가산점 등 인사상 특전도 검토해 주시기 바 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가능 ·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 지급액 확대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과 협의 및 개선계획 수립 : '20. 상반기 ○ 조례 개정 및 시행 : '20. 하반기

건의사항	조치결과
<p>11. 민간위탁하는 절차와 관련된 업무노력이나 비용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보다 재단의 영역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전 사업부서에서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위탁사무가 투출기관의 고유사업 대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음 ○ 민간위탁보다 재단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재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의 재단 고유사업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p>12.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은 운영상 애로사항을 조정하는 단위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을 활용한 개선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회의 개최 : '19.12.1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변경, 민간경상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소규모 단체 참회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 ※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운영 : '18.10월~'19.12월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관련 사업담당부서 수요조사 ('20.1.13 ~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 조정, 상근 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 적용기준 명확화 등 의견 제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월 : 제도개선 과제 검토 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13.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조합에서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정지원 용도가 포괄적으로 지정되어(지역발전 관련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성과 관리 미흡 - 이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역상생’, ‘균형발전’ 등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10~'19년 매년 약 1,730억원 출연('20년 2,015억원 출연 예정) ○ 건의내용 (市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조합(한국지방행정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재정지원을 특정용도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 시·도 협의로 매년 5개 이내 특정용도 지정 (재정지원 용도를 각 시·도에 수요조사 후 조합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 - 상생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및 추진으로 성과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 균형발전 특화사업 또는 전국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 등을 특정용도로 선정 (예시 : 도시청년 청년일자리 사업, 미세먼지 정책,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월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재정지원계정의 용도 조항 개정 건의 (市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조합(한국지방행정공제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p>14. 산하기관 성과평가에 대해 월급기준 비율로 성과급 지급해서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율 자체가 다시 차등으로 차별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市에서 변경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하며, -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서 반드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다만, 동일 직급의 직원이 동일한 성과를 거두고도 호봉에 따라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하였음(공기업담당관-1625호, 2020.2.5)
<p>15. 예산서 등 제출할 때의 원들에게 만큼은 엑셀파일로 제출해 줄 것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제출 후 시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엑셀로 정리된 자료 제출 예정
<p>16.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의회에 필히 보고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예산 성과계획서 제출 : '18.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개 전략목표, 203개 정책사업 목표, 431개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 1개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 목표 22개 성과지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성과지표 변경시 의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과 일치되도록 수정후 의회 보고

건의사항	조치결과
<p>17. 사업, 업무 등이 다른 부서로 이관될 때 이전 부서 다음 부서 간 담당기간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선대책(안) 수립, 평가방향 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기 인사 시점과 조직개편(업무이관) 시점이 다른 조직의 정량평가 - (방법) 월별 실적평가 후, 실제 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결과만 합산하여 각각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평가기관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 '20.1월 ○ 최종 검토내용 '2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반영: '20.2월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기획조정실 내 기금사업 사업 별 내용, 집행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 증원 요청인원, 인가 인원, 별도 채 용 인원 시기별 내역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3.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상근, 비상근 보수 지급 현황 (액수 및 횟수)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4.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심의 회 개최 실적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5.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공익 지원 50시간 이상 대상자 명 단 및 개별 상담 건수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6. 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 인수 대비 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 고용부담금 납부액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7.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명단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8.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 수탁 연구 제목, 건수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9. 교통공사 지하철 6호선, 7호선 임대차계약 세부내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0.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회의 결과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1. 2017년 이후 강연목적 출장 내용, 출장비 지급 내역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2. 2017년 이후 강의 신고 현황, 신고서, 사전·사후 신고 여부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3. 2015년부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증원 요청한 공문 내용 및 조치 결과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4. 투출기관 경영평가 관련 채점 기준, 사유, 위원명단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5. 민간위탁 기관 최근 3년간, 범죄 인사 등 비위 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6. 자매우호도시 71개 도시 최근 3년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내용 (국제교류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7. MOU 체결한 기초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내용 (협력상생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8. 제로페이 적용되고 있는 전체 사업 내용, 건별 총액 및 집행액 (제로페이추진반)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19.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관련 재정전략회의 결과, 주요내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0.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회의내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1. 2019 민간보조사업 현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22. 지역상생발전기금 세부 활용 내역, 성과관리 자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3. 자치분권 자문관 위촉근거, 위촉이후 지급수당 및 지급근거, 최근 근무일지, 자문내용 사본, 사무공간 현황 (협력상생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4. 정책자문특보단 7기 지금까지 확정된 위원 명단 및 프로필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5. 지방채 발행관련 행안부 승인 이행과정 절차 공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6. 지방채 사업 사전심사 이행여부, 면제 사업 상세 사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7. 성인지 예산서 관련 시기별 교육, 심사 등 상세 내역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28. 투자출연기관 장기근속휴가제도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